

EARS Series 4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5 · 31 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5 · 31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표 쓸림의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

이내영 · 홍승현 · 신소연 · 정한울 (대표집필)



EAI
EAST ASIA INSTITUTE

여론분석센터

EARs Series 4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5·31 지방선거 패널리론조사 결과 보고서



5·31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표 쓸림의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

이내영 · 홍승현 · 신소연 · 정한울 (대표집필)

EAI 지방선거패널조사 연구팀 _

위원장

이내영 (EAI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위 원

강원택 (EAI시민정치연구팀 위원장, 송실대)

김민전 (경희대)

김병국 (EAI원장, 고려대)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서현진 (성신여대)

이현우 (서강대)

임성학 (서울시립대)

정원철 (EAI)

정한울 (EAI)

연구원

홍승헌 (EAI)

신소연 (EAI)

이상협 (EAI)

협력위원

신창운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위원)

현경보 (SBS여론조사 전문위원)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부장)

“권한과 책임을 그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고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워주며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리버럴리즘이 EAI의 이상이다. EAI는 리버럴리즘이 지배하는 사회만이 디지털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진다고 확신한다.”

EARS Series 4

5 · 31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 표 쏠림의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

발행인 : 이홍구

발행처 :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저 자 : 이내영 · 홍승헌 · 신소연 · 정한울

디자인 : 김현경

발간일 : 2006년 12월 7일

정 가 : 5,000원

Copyright © 2006 by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패널여론조사란 _ 04

1. 개념과 의의
2. 조사 진행과정

후보/정당지지 변화 _ 09

1. 유권자의 선택 : 표 쓸림
2. 패널조사로 본 표의 이동
3. 정당투표의 이해득실
4. 정당투표에서의 표의 이동
5. 일관투표인가? 분할투표인가?

유권자, 무엇으로 투표하나 _ 26

1. 후보선택 요인 : 정당이나 인물이나
2. 정당정체성, 경계가 사라지나
3. 당락을 결정한 이슈
4. 경제와 선거

5·31 지방선거의 의미 _ 42

1. 열린우리당 지지기반의 와해
2. 누가 이탈했는가?
3.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4. 정당선호 변화는 정책선호 변화인가?
5. 한나라당의 전국정당화?
6. 유권자, 선거결과에 만족하나?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_ 56

1. 지방선거결과와 대선
2. 고건 전 총리에게 대한 기대
3. 정계개편의 진로

정보취득경로 _ 61

패널조사 방법론 및 선거결과 _ 64

부록 1. 전국패널조사 질문항목 _ 71

부록 2. 지방패널조사 질문항목 _ 74

패널여론조사란



1. 개념과 의의
2. 조사 진행과정



1. 개념과 의의

패널여론조사

-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조사를 반복하여 여론을 추적
- 유권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 가능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조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여론의 변화는 물론 이러한 변화를 누가 주도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기법으로는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이 있다. 시계열분석은 다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일반여론 조사를 한데 모아서 마치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취급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즉 각기 다른 응답자들에 대한 조사로부터 전체적인 변화추세를 발견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여론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여론은 변함이 없는데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

에 참여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점이 시계열분석의 가장 근본적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변화의 주도세력과 그 원인에 대한 결론도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럴듯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패널조사는 시계열분석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과학적 대안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실제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지, 누가 변화의 주도세력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패널조사는 현재의 여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해는 물론 이에 기반 하여 향후 여론의 추세에 대해서도 훨씬 풍부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패널조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패널조사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일반여론조사와 달리 여러 번의 조사시점에 걸쳐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응답률을 유지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패널 이탈율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초기 패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



는 것이다.

또한 패널조사는 변화하는 여론을 추적하는데 장점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매 조사 간 여론 변화에 작용하는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고 그만큼 다양한 통계적 오차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패널 오염효과이다. 반복되는 조사과정을 통해 패널로 선정된 응답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 자신의 생각과 무관하게 바람직한 응답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즉 선발요인에 따른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패널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 디자인 및 세심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대규모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차원의 관리도 필수적이다.

선거연구의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전국단위 패널조사의 경험은 두 번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패널조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영국, 독일 등 손꼽을 정도 밖에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패널조사의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진행과정

- 서울·부산·광주·충남 패널 800명 각 4회 실시
- 전국패널 1,300명 총 2회 실시
- 패널유지율 70% 목표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는 2005년 9월부터 공동으로 패널여론조사를 준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부산·광주·충남 등 4개 지역에서 각 800명의 패널에 대해 총 4회, 전국패널 1,000명에 대해 총 2회로 기획하였으며 최종패널유지율 70%이상을 목표로 진행했다

패널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거기간 한 달 동안 네 번으로 기획된 사례는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다. 한국의 선거는 부동산의 비율이 높고 그에 따른 투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변화 추세를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패널조사는 유권자 투표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사이다.

패널조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네 개 기관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지역 선정·조사회수·조사주제·조사방법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및 준비가 이뤄졌다.

우선 조사지역 선정은 ①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하고 여론변동 가능성이 높아 패널조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② 2007년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지역 패널은 서울·부산·광주·충남 등 4개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전국패널도 함께 구성하였다. 조사회수는 지역패널 총 4회, 전국패널 총 2회로 정하였다.

표면적인 여론 흐름의 변화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식 및 태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질문항목으로 반영하기 위해 심층집단토론(FGD: Focus Group Discussion)을 진행했다.

한국리서치는 4월 19~20일 열린우리당 지지층·한나라당 지지층·무당파층을 각각 20~30대, 40~50대로 구분한 총 6개 집단에 대해 심층집단면접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각 집단의 인식 및 선호차이를 결과를 설문지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유권자의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패널조사 방법으로는 선거조사의 특성, 방법



론상의 타당성과 신뢰성, 조사비용 및 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전화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조사기간은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매 회 패널조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였다. 까다로운 패널조사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었던 것은 한국리서치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시스템과 전체 110회선 이상의 전용회선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 동아시아연구원 지방선거패널조사 연구팀 _**

위원장 _ 이내영 (EAI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위원 _ 김병국 (EAI원장, 고려대) · 강원택 (EAI시민정치연구팀 위원장, 송실대) · 김민전 (경희대) ·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 서현진 (성신여대) · 이현우 (서강대) · 임성학 (서울시립대) · 정원철 (EAI) · 정한울 (EAI)

연구원 _ 홍승헌 (EAI) · 신소연 (EAI) · 이상협(EAI)

*** 중앙일보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위원**

*** SBS 현경보 차장(여론조사 전문위원)**

*** 한국리서치**

총괄기획 _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부장

자문팀 _ 노익상(대표) · 심재웅(상무)

연구팀 _ 김춘석 · 박종선 · 유은정 · 박돈해

전화조사 _ 총괄팀장 1 · 팀장 1 · 슈퍼바이저 1 · 감청원 4 · 면접원 90

후보/정당지지 변화



1. 유권자의 선택 : 표 쓸림
2. 패널조사로 본 표의 이동
3. 정당투표의 이해득실
4. 정당투표에서의 표의 이동
5. 일관투표인가? 분할투표인가?



1. 유권자의 선택 : 표 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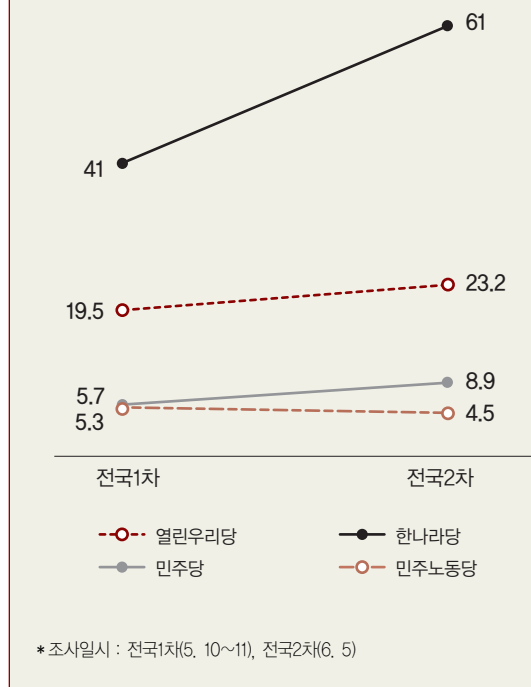
전국패널

지난 5·31 지방선거는 여당 지지층의 와해와 한나라당으로의 표 쏠림이 일어나면서 여당의 사상 최악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식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거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떠한가? 또한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한국 지방선거 최초로 선거 운동 기간에 실시한 패널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전국 1,29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 20일 전에 실시된 1차 조사(5.10~11)와 선거 이후 실시된 2차 조사(6.5, 1001명)에서 드러난 후보 지지도의 변화를 분석하기로 한다. 20일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선거가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던 시기의 표심의 이동을 제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차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림 1] 지지후보의 소속정당(%)



는 응답자가 약 41%로 열린우리당의 19.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긴 하였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전체 약 3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막판 열린우리당의 추격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선거 후 실제로 투표한 후보의 소속정당을 묻은 2차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무려 61%에 달했던 반면,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차에 비해 열린우리당,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각각 3.7%, 3.2%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무려 20% 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1차 조사 당시 30%에 달하던 부동층들이나 다른 정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실제 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로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선거경쟁이 본격화되면 불리한 정당의 지지층이 결집하여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선거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열세에 놓여있는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이탈현상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이탈자들과 무당파 관망층은 한나라당 지지로 급격히 이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지역패널

(1) 서울

• 강금실 vs 오세훈 “맞바람이 강했다”

4월 25일 실시되었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당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1차 조사(4.26~29)에서 나타난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후보의 격차는 이미 19.7% 포인트에 이르렀다. 이후, 2차 조사(5.18~19)에서 오세훈

후보는 59.1%, 강금실 후보는 29.8%의 지지율을 얻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9.3% 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선거를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실시된 5.24~26일의 3차 조사에서는 31.8% 포인트까지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세훈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다.

(2) 부산

• 오거돈 vs 허남식 “압도적인 표 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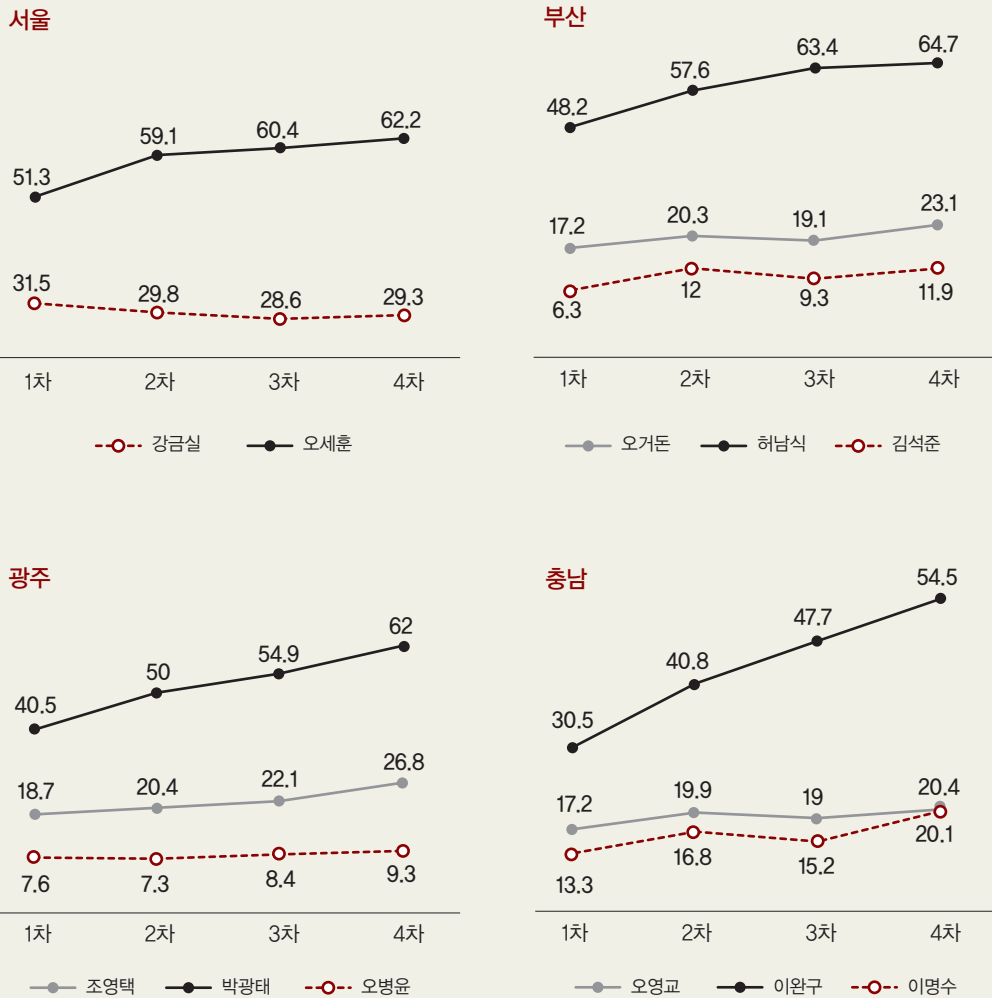
현직 부산시장인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 지지율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부산이 한나라당의 텃밭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그리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다. 실제로 선거 직전 3차 조사에서 허남식 후보의 지지율은 63.4%로 오거돈 후보의 19.1% 보다 무려 43.2% 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 중반 문재인 수석의 “현 정권은 경상도 정권”이라는 지역주의 동원전략도 양 후보간 지지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3) 광주

• 조영택 vs 박광태 “기사회생 민주당”

현 광주시장인 민주당 박광태 후보와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두 후보 간의 지지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차 조사에서 이미 박광태 후보의 지지도가 40.5%로 조영택 후보 지지도인 18.7%의 두 배를 넘어섰고, 선거 이전에 실시된 3차 조사에서 박광태 후보

[그림 2] 지역별 후보지지도 변화(%)



* 조사일시 : 1차(4.27~29), 2차(5.18~19), 3차(5.24~26), 4차(6.1~2)

는 54.9%, 조영택 후보는 22.1%의 지지율을 확보하였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무려 32% 포인트 차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4) 충남

- 오영교 vs 이완구 vs 이명수 “여당 대신 한나라당”

충남지역 1차 조사결과 세 후보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30.5%,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17.2%,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13.3%로써 한나라당 후보와 열린우리당, 국민중심당 후보와의 격차가 2배 정도 나긴 했지만, 그 격차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근접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의 지지율



이 지속적으로 상승, 4차 조사 시점(6.1~2)에서는 54.5%까지 치솟았다.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는 3차 조사 때까지는 2위의 자리를 고수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국민중심당의 이명수 후보에게 역전 당했다. 충청 지역에서 실시된 역대 여론조사를 보면 자민련

등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실제 득표율보다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투표선호를 감추는 충청 유권자의 성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숨은 표도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2. 패널조사로 본 표의 이동

-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이탈,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져
- 한나라당 지지층의 강한 결집과 이탈표 흡수로 지지격차 커져

(1) 서울

표심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1, 2, 3, 4차 지방패널조사에서 모두 응답한 534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지사(시장)선거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4차 조사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응답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3] 후보지지 표심의 변동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의 결속도와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이탈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경우 1차 조사에서 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응답자 중 83%만이 2차 조사에서도 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4%의 응답자들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지지로 선회했다. 반면, 1차 조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 불과 4%만이 강금실 후보 지지로 선회해 이와는 대조를 이뤘다. 오세훈

후보가 90%가 넘는 높은 지지자 유지율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강금실 후보는 80% 초반의 지지자 유지율을 보였다. 이는 강금실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오세훈 후보의 지지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부산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은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율은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율에 비해 매우 크다. 특히 오거돈 후보 지지자들이 이탈하여 허남식 후보 지지로 많이 선회한 반면, 허남식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율은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오거돈 후보 지지로 선회한 사람들도 매우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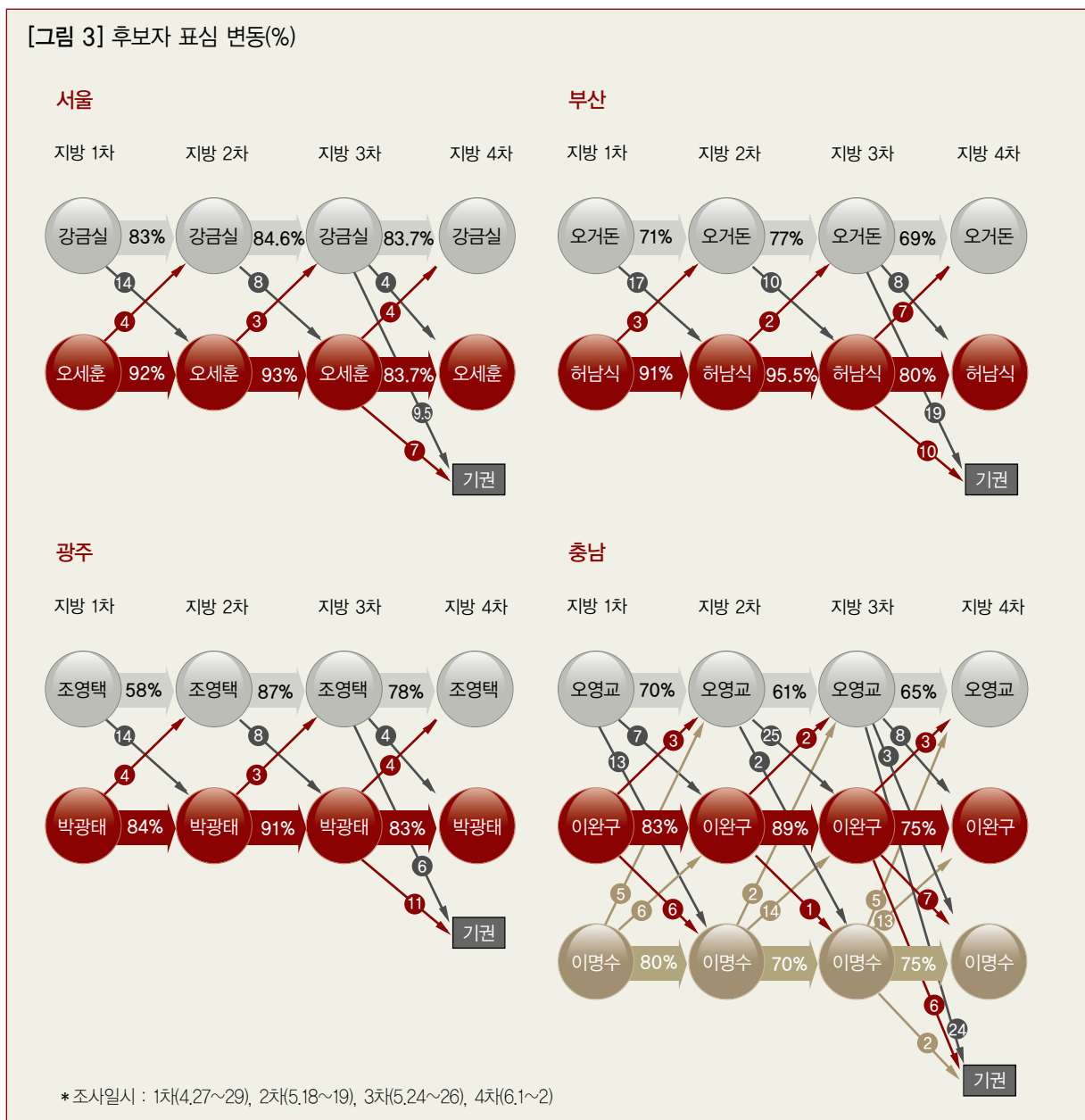
1차 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 중 71%, 2차 조사의 77%, 그리고 3차 조사의 69%만이 오거돈 후보 지지를 지속적으로 밝힌 반면,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각 조사별로 91%, 95.5%, 80%라는 높은 지지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3) 광주

광주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의 이탈율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그림2]에서 보이는 것처럼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의 지지율은 18.7%에서 20.4%, 22.1%, 26.8%로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3]에서 주목할 점은 조영택 후보의 경우 1차 조사와 2차 조

사 사이에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이탈율은 무려 42%에 달했고, 2차와 3차 사이, 3차와 4차 조사 사이의 이탈율은 그에 크게 못미치는 13%, 2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가 조영택 전 국정상황실장으로 결정된 시기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후

[그림 3] 후보자 표심 변동(%)





보선정과정이 전략공천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대한 실망과 함께 참여정부의 '호남 홀대론'이 이슈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지지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광태 후보 지지로부터 이탈한 유권자 비율은 매우 적은 반면, 조영택 후보지지에서 박광태 후보 지지로 선회한 비율은 8~17%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전부터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열린우리당과 조영택 후보에 대한 실망이 선거과정을 거치며 확대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충남

충남지역 여론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선거 막판에 한나라당으로의 표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 막판보다는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 사이, 즉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당 지지자의 이탈율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지역을 보면, 2차 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 중 25%가,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 중 14%가 각각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지지로 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매우 강하게 나타났

다.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의 지지자들은 2차 조사에서 오영교 후보에게로 3%, 이명수 후보에게로 6% 이탈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2%, 1%, 선거 후 실시한 4차 조사에서는 3%, 7%만이 이탈해 매우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는 매우 불안정한 지지자 유입/이탈현상을 보인다. 1차 조사에서 오영교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70%, 2차 조사의 61%, 3차 조사의 65%만이 지속적으로 오 후보 지지를 유지했을 뿐, 매 조사마다 이탈자 규모가 30%가 넘을 정도로 불안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로 되돌아가 보면 이명수 후보의 지지율은 두 번의 상승기를 거친다. 2차 조사에서는 오영교 후보와 이완구 후보 지지자의 각각 13%, 6%가 각각 이명수 후보 지지로 유입되었지만 이완구 후보(6%), 오영교 후보(5%)로의 이탈 규모는 이에 못 미쳤다. 3차 조사에서 이명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실제투표에서 이탈한 비율(이완구 후보로 13%, 오영교 후보로 이탈 5%, 기권으로 이탈 2% 등)보다 새롭게 인입된 지지율(오영교로부터 3%, 이완구로부터 7%)을 상회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지율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최종 투표에서 기존의 주요 정당 지지자들이 이명수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결과라기보다는 관망하던 부동층이 움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3. 정당투표의 이해득실

- 전국적으로는 단체장 후보투표와 정당투표 경향이 유사
- 지역별로는 단체장 후보투표와 정당투표 패턴에 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 단체장·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 뿐 아니라 광역의회·지방의회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도 실시되었다. 지역구 별로 진행되는 후보 투표가 후보의 지역대표성이 강조된다면 정당투표는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당투표는 단체장/지역구 의원 투표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본다.

전국 패널 : 정당투표도 한나라당

광역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도 단체장 선거에서처럼 한나라당으로의 표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율이 상승한 세 정당 중에서도 한나라당의 경우 정당투표 지지율이 13%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가장 큰 폭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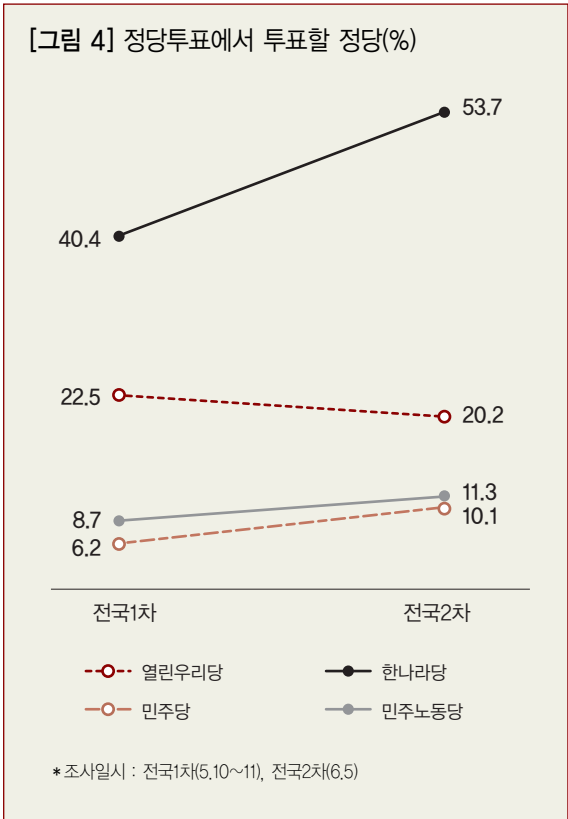
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1차 조사에서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대거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단체장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 및 비례제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이 독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의 경우 2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이 1차 조사 당시의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다. 유독 열린우리당만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 정당투표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40.4%의 지지를 획득했으며, 열린우리당이 22.5%, 민주노동당이 8.7%, 민주당이 6.2%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2차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의 53.7%가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1차 조사 때보다 약 13% 포인트의 증가를 기록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2.3% 포인트 감소한 20.2%의 유권자 지지만을 획득하였다.

다만 역대 정당투표에서 후보지지율보다 높은 정당 지지를 획득하면서 제도권 진입에 성공한 민



주노동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역기반이 주로 수도권과 호남 및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이거나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시도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국패널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 경향들이 개별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지역패널

(1) 서울 : 정당투표 쏠림현상은 미약

서울지역의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투

표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후보 선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회를 거듭할수록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급상승하지만 정당투표에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사실상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차 조사에서 44.1% 비율의 지지를 보이지만 이후 45.2%, 48.7%, 그리고 마지막 조사에서는 오히려 0.1%포인트 떨어진 48.6%의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최고 62.2%까지 올라간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 개인의 인물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대로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당 지지율 추락이 강금실 후보의 지지율 하락폭보다 크다는 점에서 반대로 정당요인이 강금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국적 차원에서의 정당투표 지지율에서는 뚜렷한 소등을 올리지 못했던 민주노동당의 경우 서울에서는 첫 조사 시 9.8%에서 마지막에는 15.8%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2) 부산 :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

부산지역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결국 4차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59.9%, 열린우리당 17.3%로 42% 포인트 가량의 지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수석이 호남표의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현 정권은 부산정권”임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투표의 지지율은 더욱 크게 벌어져 여당 지도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지율의 상승과 정체를 거쳐 마지막 조사에



서는 열린우리당 수준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3) 광주 : 정당투표에서는 접전

광주지역의 정당투표 지지율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호남 유권자의 민심을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3.9%의 지지를 보이면서 31.6%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에 약 2.3%포인트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2차 조사부터 민주당의 지지율이 열린우리당을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 2차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31.4%, 민주당의 지지는 31.8%를 보이고, 이후 3차 조사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30.7%, 민주당의 지지는 31.8%로 두 정당에 대한 지지도 격차가 조금 벌어졌다. 이렇게 미세한 차이는 선거 이후의 조사에서 결국 민주당 45.7%, 열린우리당 29.3%의 지지를 보이며 두 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호남에서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철회 현상은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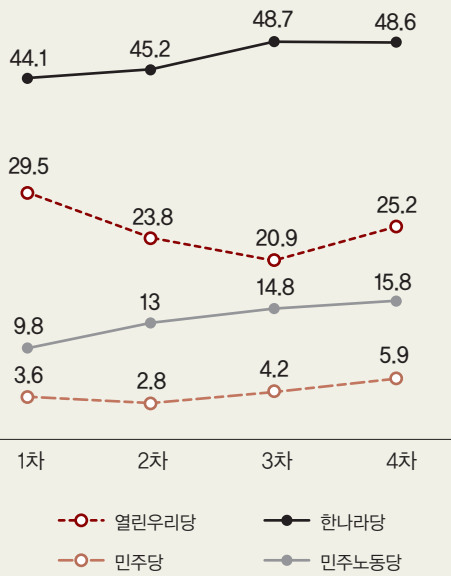
우리당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민주당과의 합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조사에서는 20.2%의 지지를 얻어 호남이 민노당 지지율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4) 충남 : 초반 접전에서 급격한 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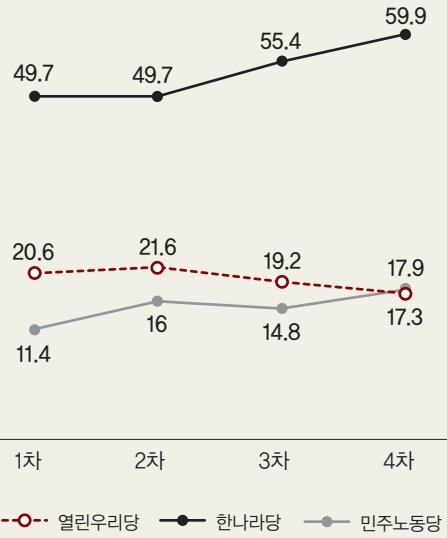
충남지역에서의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당투표에서의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28.6%로 열린우리당(21.9%)과 불과 6.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4.6%, 41%, 45.4%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2차 조사에서 23.2%의 당지지율을 얻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4차 조사에서는 국민중심당 26.5%보다도 약 8%포인트 낮은 지지율(18.6%)로 떨어졌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국민중심당의 약진현상이 충남지역 정당투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정당투표 시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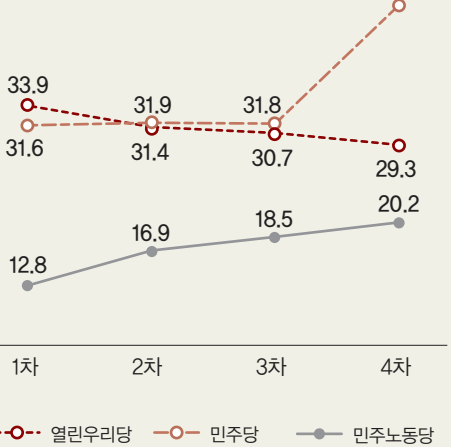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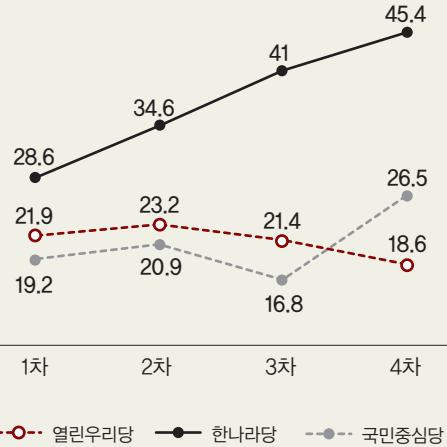
부산



광주



충남



* 조사일시 : 1차(4.27~29), 2차(5.18~19), 3차(5.24~26), 4차(6.1~2)



4. 정당투표에서의 표의 이동

정당투표에서의 표심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1·2·3·4차 지방패널조사에서 모두 응답한 응답자들을 선택하여 이들이 각 조사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추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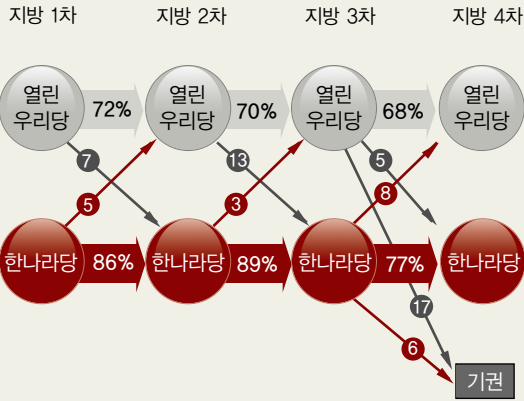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당투표 이동을 비교해볼 때, 앞서의 후보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이탈율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이탈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탈한 응답자들의 비율도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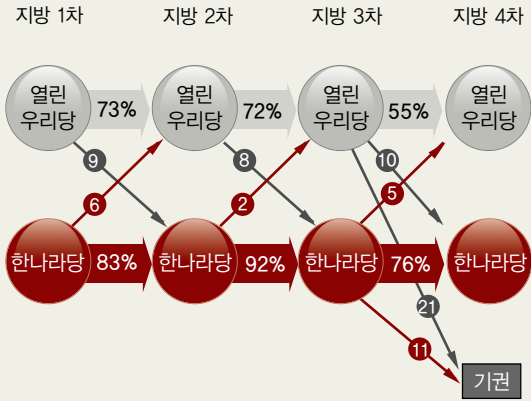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경합한 광주에서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정당투표 이탈율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율에 비해 훨씬 크다. 정당투표는 후보요인이나 캠페인 등 단기적인 투표결정 요인들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당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6] 정당투표에서의 표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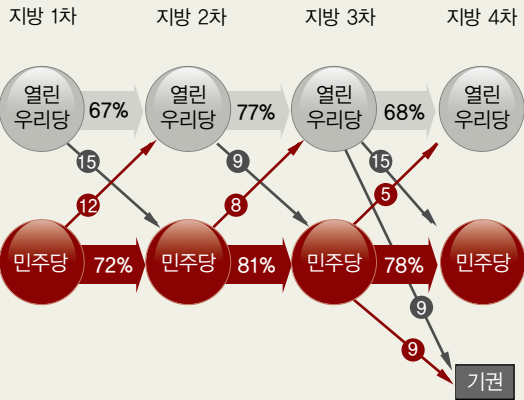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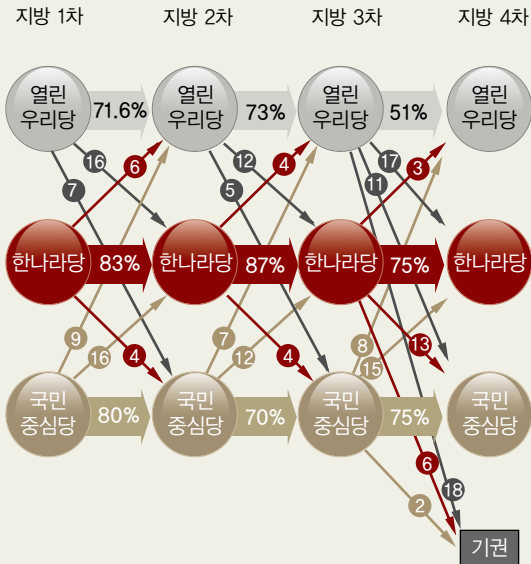
부산



광주



충남



* 조사일시 : 1차(4.27~29), 2차(5.18~19), 3차(5.24~26), 4차(6.1~2)



5. 일관투표인가? 분할투표인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 단체장,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지역구 의원, 기초의원 및 광역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등 총 6개의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여러 단위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초단체선거와 광역단체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언론의 관심이 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 집중되는 가운데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처럼 유권자의 관심과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정당이 후보의 능력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추론하는 인지적 도구(cognitive shortcut)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도 관심사이다

전국패널

1차 전국패널 조사에서 일관투표와 분할투표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 직후 2차 조사 결과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투표할 때 광역단체장과 같은 정당에 속한 후보를 투표한 일관투표의 경향이 55.1%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43.9%)보다 11%p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4%의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했다는 결과는 전체적으로 각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지 않은 유권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패널

(1) 서울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투표 직전까지 일관투표와 분할투표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투표장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2) 부산

부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 이전 1차, 2차, 3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일관투표의 경향이 크게 강화되고 나타나고 있다.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역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를 찍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할투표 경향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정체성이 강력한 투표 결정요인이었음을 말해준다.

(3)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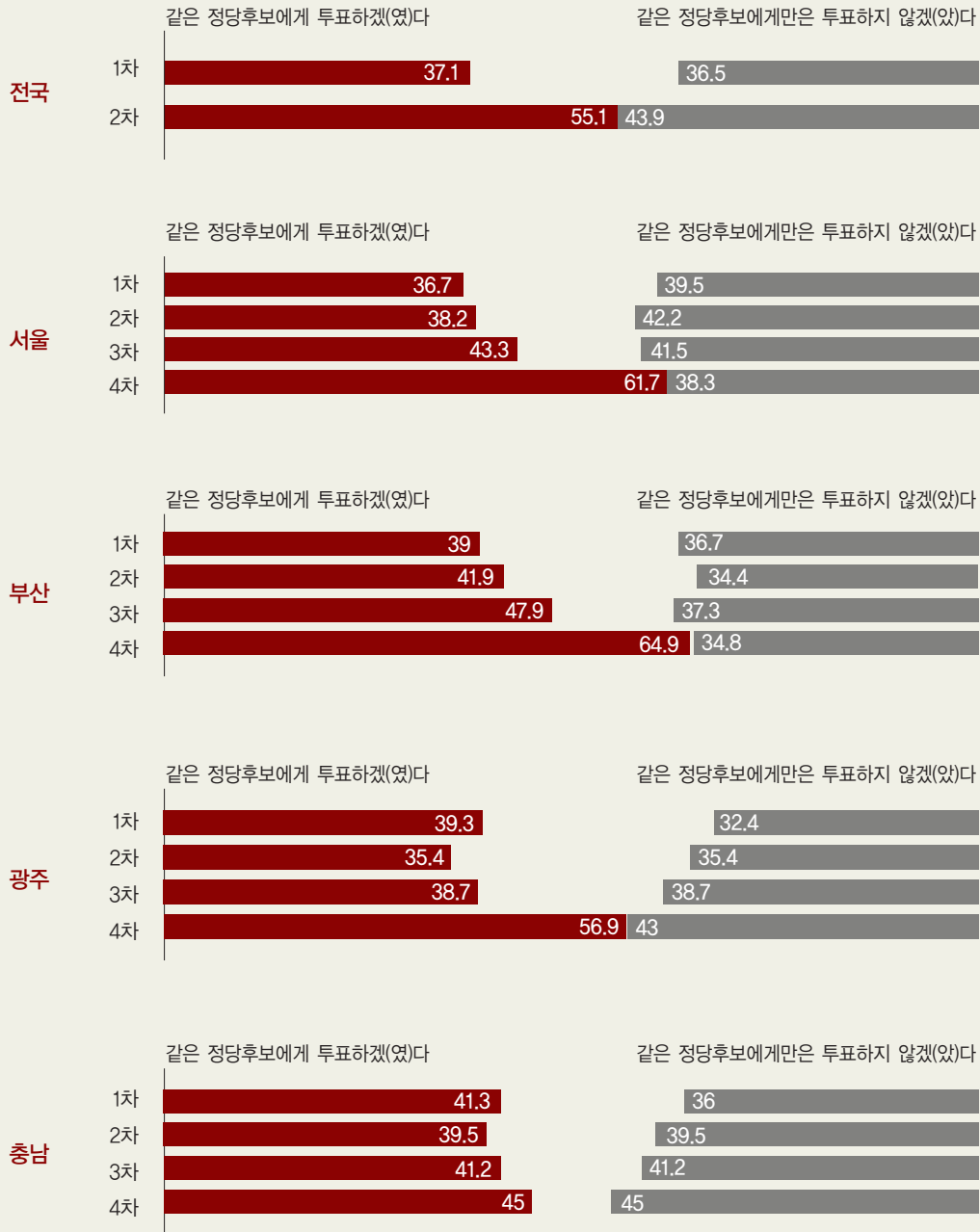
광주 지역에서는 최종 실제투표에서 일관투표 비율이 56.9%까지 올라갔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일관투표의 경향과 분할투표의 경향이 공존했다. 이는 광주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정당지 지성향에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주당으로의 지지쏠림 현상이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충성심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4) 충남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투표에서 일관투표비중이 크게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충남지역은 조사지역 중 유일하게 1차 조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분할투표의 경향이 일관투표 경향을 상회한 지역이다. 최종투표에서도 같은 정당에 투표하지 않은 분할투표가 45%에 달했다. 이는 충청지역 차원에서의 정당-유권자간 재정렬(realignment)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된다.

[그림 7] 일관투표/분할투표(%)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유권자, 무엇으로 투표하나



1. 후보선택 요인 : 정당이나 인물이나
2. 정당정체성, 경계가 사라지나
3. 당락을 결정한 이슈
4. 경제와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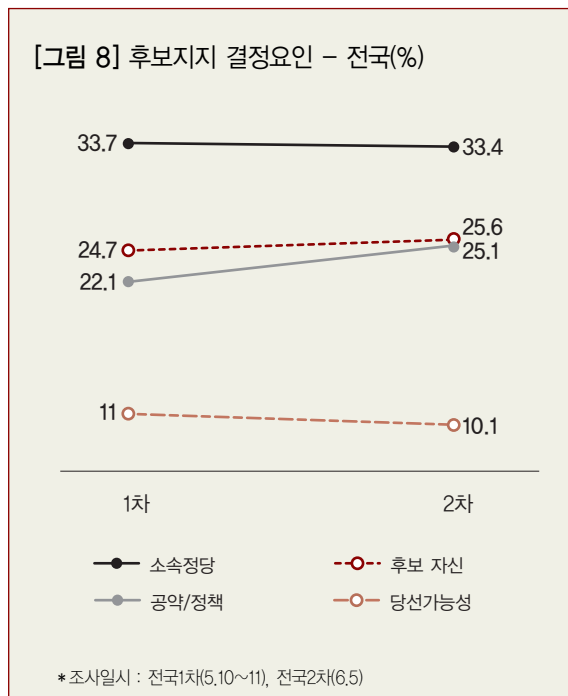
1. 후보선택 요인 : 정당이나 인물이나

전국 : 후보요인과 정당요인

본 패널조사에서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후보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물어본 결과 후보 개인의 인물 요인보다는 그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표를 던질 것 혹은 던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정당을 후보 지지의 주요 요인으로 삼는

비율은 1차 조사에서 33.7%로써, 후보 개인이나 공약, 정책으로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각각 9%p, 11.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이후 실시된 2차 조사에서도 공약이나 정책으로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1차 조사에 비해서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후보를 지지할 때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한다는 비율이 33.4%로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대 선거여론조사에서 정책과 인물을 보고 투표한다는 규범적 응답 대신 정당요인을 강조함으로써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후보선택기준의 지역별 편차

전국 패널조사 결과에서는 인물과 정당 요인 중 정당요인이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그렇다면 각 개별지역 선거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적용될 수 있을까? 지역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후보 지지 요인을 인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다른 세 지역



에서는 인물보다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후보 선택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1) 서울 : 후보 요인 상대적으로 커

서울지역의 유권자들은 주로 후보 개인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지방 선거에 맞춰서 ‘바람’ 처럼 등장한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나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의 개인적 매력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의 정당투표 분석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서울지역에서는 양당간 정당투표 지지율에서는 나타나는 격차보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후보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2) 부산 : 소속정당이 투표결정

부산 지역에서 후보 지지의 결정요인으로 1차, 2차, 3차 조사에서 모두 후보의 소속정당, 후보 자신, 공약 및 정책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지역은 정당요인과 후보요인을 꼽은 응답자 비율의 차이가 다른 세 지역에 비해 가장 적다는 점에서 후보요인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전인 3차 조사까지는 정당·후보·정책/공약 요인이 고르게 작용하다 4차 조사에서 정당요인이 급증하고 후보요인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네개

조사지역 중 일관되게 정당요인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당이 제일의 투표결정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광주 : 정당에서 정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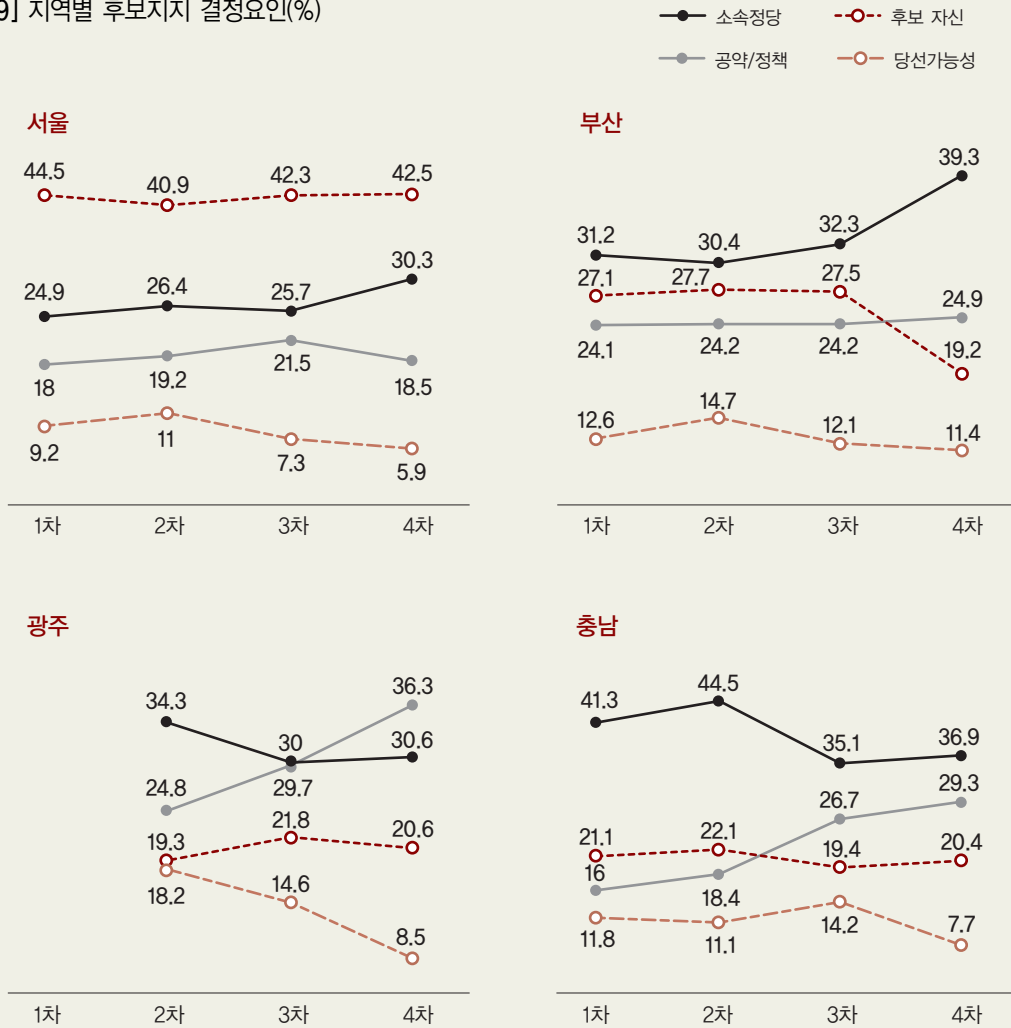
광주지역에서도 후보 지지의 요인으로 후보자 자신보다는 후보가 속한 정당 요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3차 조사 이후에는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요인을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초기 소속정당을 중시하던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새로운 후보 선택기준을 필요로 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4) 충남 : 정당으로 후보선택

충남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후보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소속 정당을 꼽는 비율이 1차와 2차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는 후보 자신의 인물 요인보다 후보의 소속 정당 때문에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무려 20%p 이상 높았다. 호남과 마찬가지로 정책요인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서울 외에서는 정당요인이 증시되는 가운데 선거에 임박할수록 정책/공약 요인의 영향이 커지고 후보요인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그림 9] 지역별 후보지지 결정요인(%)



* 광주1차 조사시 열린우리당 당내경선으로 조영택 후보에 대한 결정요인이 제외됨



2. 정당정체성, 경계가 사라지나

- 정당태도는 정당 지지·투표 지지에 비해 쓸림 약해
- 정당지지자별·지역별로 정당태도의 변화 및 강도 편차

후보 및 정당투표 결정에 있어 정당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선거운동이 전개된 한달여의 시간 동안 유권자의 표심은 급격하게 한나라당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정당을 지지한 사람조차 경쟁 정당인 한나라당 지지로 상당수 옮겨가고 가는 등 정당지지 경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기존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정당일체감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어 전국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당지지연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헤쳐모이는 식이 정당재정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정당과 유권자간의 정렬(Party alignment)이 재편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정당에 대해 명확한 선호 혹은 혐오태도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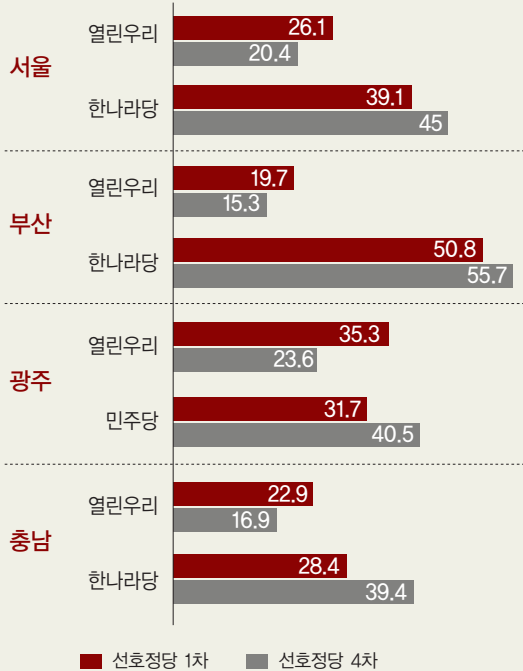
진 유권자들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지지 이탈 현상을 분석 한다.

(1) 선호정당과 (2) 혐오 정당 차원별로 조사한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정당 선호도에서는 한나라당을, 반대로 혐오도에서는 열린우리당을 꼽은 응답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시간별 변화의 규모와 양당 간 선호/혐오도의 차이는 후보지지도나 정당투표에서의 격차 보다 폭이 좁다는 점에서 선호나 혐오같은 정당 태도는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도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차와 4차 조사간의 정당선호도의 차이를 감안하면 정당선호/혐오태도가 선거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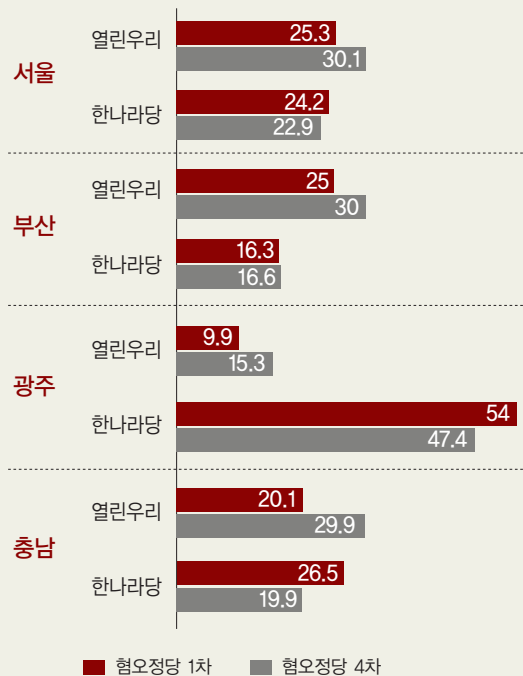
선호정당

[그림10]에서 정당 선호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격차는 앞서 실제 선거과정에서 양당 사이에 나타난 후보 지지도 격차[그림1] 및 정당투표 비율차이[그림6]보다 훨씬 적다. 특히 선거운동 직전인 1차와 선거후 4차 조사 사이

[그림 10] 선호정당 변화(%)



[그림 11] 혐오정당 변화(%)



의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른 변동의 폭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운동 직전인 1차 조사에서 광주에서는 정당 선호도 자체는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충남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하기는 하되, 열린우리당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서울에서는 이 보다는 큰 격차(13%p)가 나타나지만 후보 및 정당투표에서 보여준 격차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편이다. 다만 부산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격차가 크다.

그러나 4차 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당 선호도가 낮아지고,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양당간 정당선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혐오정당

어느 정당을 가장 싫어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꼽은 응답자와 한나라당을 꼽은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11]와 같다. 혐오도 차원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차이는 매우 미세해지고 있다. 1차 조사만 보면 서울에서는 열린우리당(25.3%)과 한나라당(24.2%)을 싫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등했다. 광주에서는 열린우리당을 혐오한다는 응답자는 9.9%에 불과했고 충남에서는 한나라당을 혐오하는 비율이(26.5%) 열린우리당을 싫어하는 응답비율(20.1%)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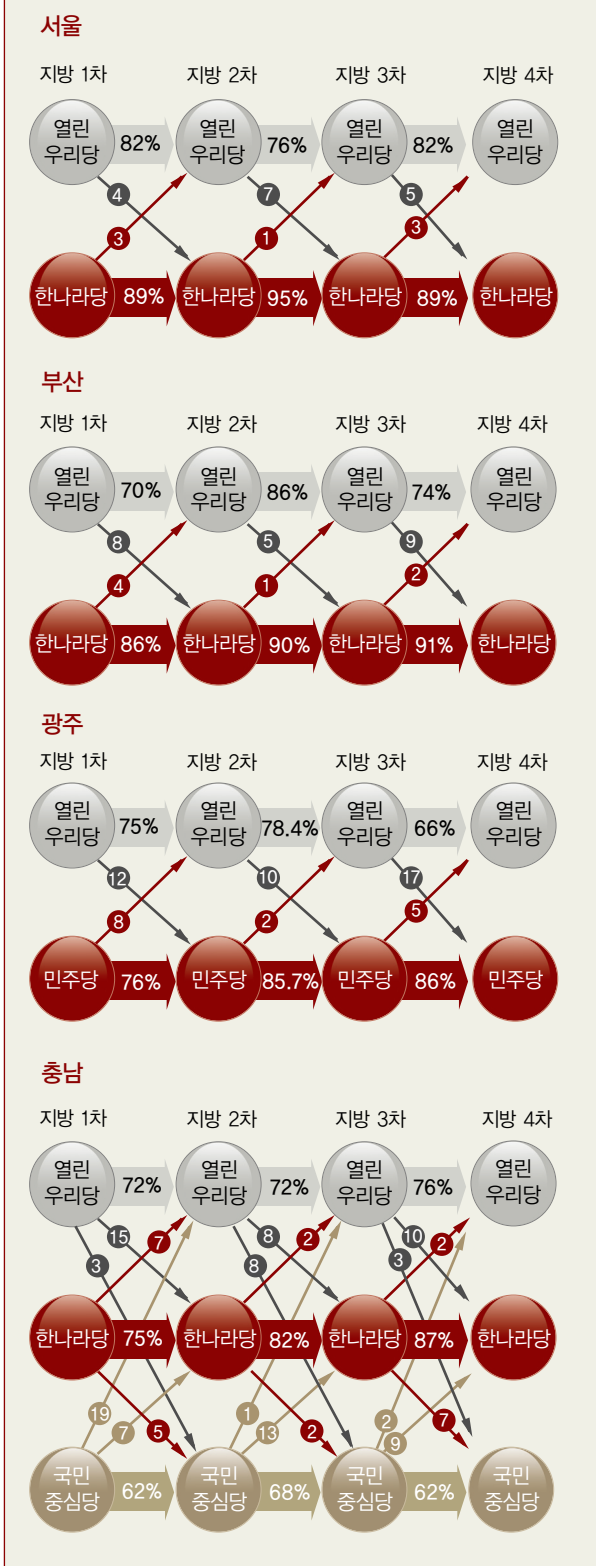
물론 4차 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혐오자 수가 증가하고, 한나라당에 대

한 혐오 응답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은 선호도의 변동이나 후보 지지도 변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서 적지 않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전국적 차원에서 정당재정렬 현상이 나타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물론 열린우리당 선호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부동층이나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선호층만 분석을 해보면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에 비해 한나라당으로 이탈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더구나 한나라당 선호자들의 경우 오히려 강한 정당일체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정당 선호도의 변화를 패널조사를 통해 추적해보면 지역별로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광주와 충남 지역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간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의 경우 정당선호도를 명확히 밝힌 사람들에서 조사 정당지지가 간 이탈이 높았다. 그러나 서울처럼 지역대표정당이 없거나 반대로 부산처럼 지역대표정당이 명확할 경우 정당 선호도를 가진 응답자들사이의 이탈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정당지 지재편현상을 전국차원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여당의 지지기반 와해현상이 행정수도 이전과정에 실망한 충청권과 영남정권론으로 불신이 심화된 호남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추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정당선호도 변동(%)





3. 당락을 결정한 이슈

-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여론이 우세
- 지역주의 동원 및 북풍 이슈는 선거에 큰 영향 못 미쳐
-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총청권에는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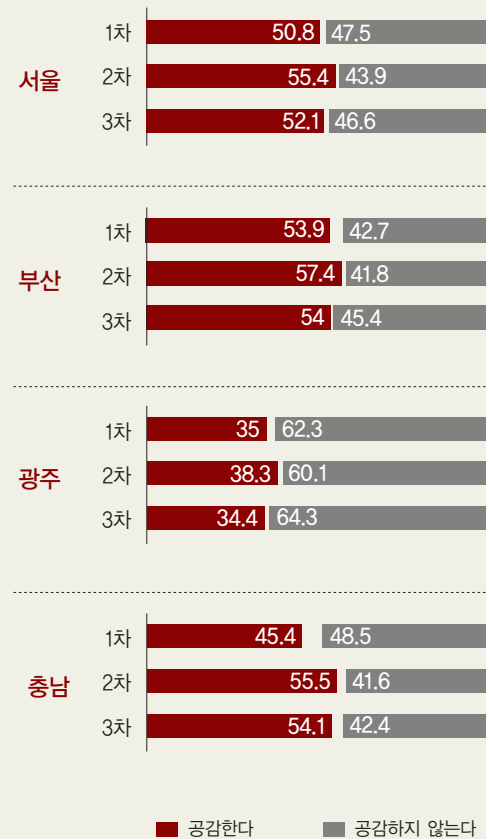
선거 전 세 차례 조사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대

정권 심판론 vs 지방정부 심판론

이번 선거의 최대이슈는 결국 한나라당의 노정권 심판론과 열린우리당의 지방정부 심판론간의 대결로 압축된다.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캠페인 슬로건과 “부패한 지방권력을 교체하기 위해 여당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캠페인 슬로건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하였다. 아래에서 그 조사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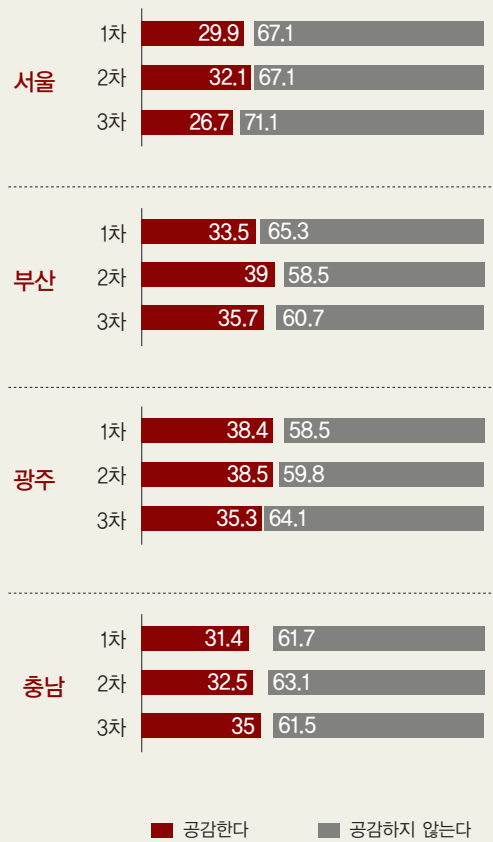
광주를 제외한 세 개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중앙정부 심판론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반면 지방정권 교체론에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심판론에 대해 서울과 부산 유권자들은 공감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과 영남이 반열린우리당 여론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그림 13] 노무현 정권 심판론 공감도(%)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그림 14] 부패한 지방정부 교체론 공감도(%)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해 과반수이상 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당이 주장하는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해서는 3차 조사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71.1%의 응답자들이 지방권력 교체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 지역에서 지방권력 교체론에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명박 시장 업무에 대해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부산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여론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보다 매 조사에

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타 지역과 달리 광주의 특이한 점은 여당과 야당에서의 슬로건에 대해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야당이 내세운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60% 이상의 유권자들이 공감하지 않았으며 여당이 주장한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다. 호남 유권자들이 여야정당에 갖는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충남에서는 1차 조사에서 야당의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45.4%)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48.5%)과 비슷했다.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공감한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해서 역시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vs 현직 시도지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방권력 심판론 대신 노정권 심판론이 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중앙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과 대비되게 유권자들이 각 지방정부의 행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대통령·현직 시장·도지사의 국·시·도정 지지도(%)

(%)	노대통령 (열)	서울(한) 이명박	부산(한) 허남식	광주(민) 박광태	충남(국) 심대평
매우 잘함 + 대체로 잘함	35.1	83.4	71.8	68.9	78.1
자료	1차 전국		1차 지역패널		

우선 전국패널 1차조사에서 현재의 시장·도지사의 시(도)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무려 70.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13.3%, 대체로 잘했다 57.6%).

지역별로 보면 청계천 복원으로 주가를 올린 이명박 시장의 경우 무려 83.4%가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뿐 만아니라 충남의 심대평 지사는 78.1%, 부산의 허남식 시장 역시 71.8%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광주의 박광태 시장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68.9%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1차 35.1%, 2차 조사 18.9%)와 대조되는 결과이다.

박대표 피습사건의 지역별 영향

선거 10일 전에 일어난 이번 선거 최대의 이슈인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 본 패널조사는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네 개 지역 유권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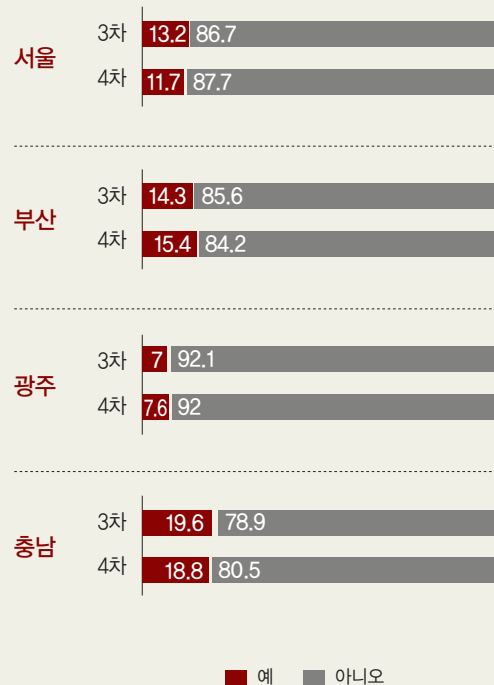
이에 대해 서울 87%, 부산 85%, 광주 92%,

충남 79% 등 세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수의 응답자가 자신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충남 지역에서는 약 20%의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해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이 선거 막판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했다.

충남지역에서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으로 후보선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충남 유권자 118명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바꾼 경우가 27%, 지지후보가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가 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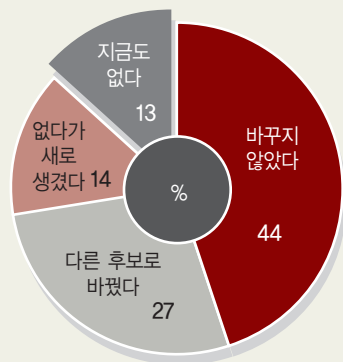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패

[그림 15] 박근혜 피습사건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 미쳤나?(%)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그림 16]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 후보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충남 유권자의 지지후보 변경 여부



* 유권자 118명 대상
충남지역패널 제3차 조사(5.26)

[표 2] 피습사건 이후 이완구 후보지지 변동

2차 조사	3차 조사
지지 후보	이완구 후보 지지로 선회
오영교 17명	7명(41%)
이완구 57명	57명(100%)
이용길 5명	2명(40%)
이명수 14명	7명(50%)
부동층 15명	13명(87%)

5월 20일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널조사를 통해 118명의 지지후보 변경 내용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한나라당 지지자 57명은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그대로 이완구 후보를 지지하고, 비 한나라당 지지자 51명 중 29명(57%)이 추가로 이완구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또한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를 지지했던 17명 중 41%,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를 지지했던 14명 중 50%가 한나

라당 이완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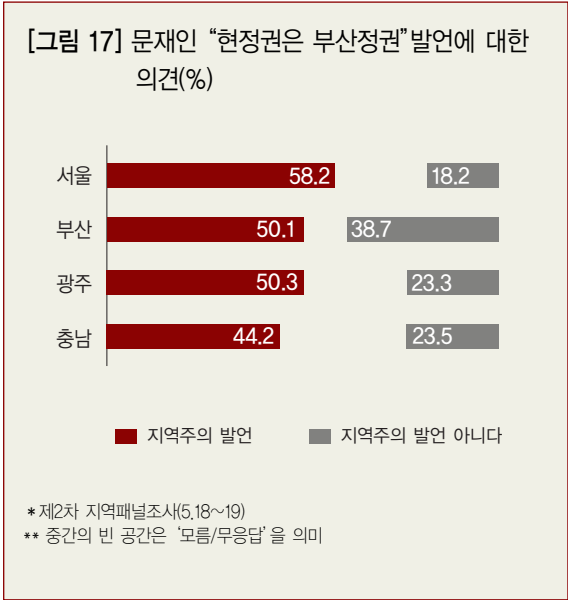
결국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은 충청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나라당으로 투표번호를 바꾸는데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충청권의 표심은 초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충남의 정서와 대전의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충남지역에서의 표의 이동이 가져온 효과를 보면 개표 마지막까지 당락을 좌우하지 못한 대전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변경시킬 파괴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피습 직후 대전시장 선거 상황을 걱정하고, 피습 이후 9일 만에 퇴원, 그 직후 대전으로 달려가 선거 유세를 감행한 박근혜 대표의 행보는 결국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우세를 보이던 열린우리당의 염홍철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의 당선을 가져오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수석의 “부산정권” 발언

정부 및 여당은 선거 초반 선거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영남의 지역주의를 동원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이 “현 정권은 부산정권인데 왜 부산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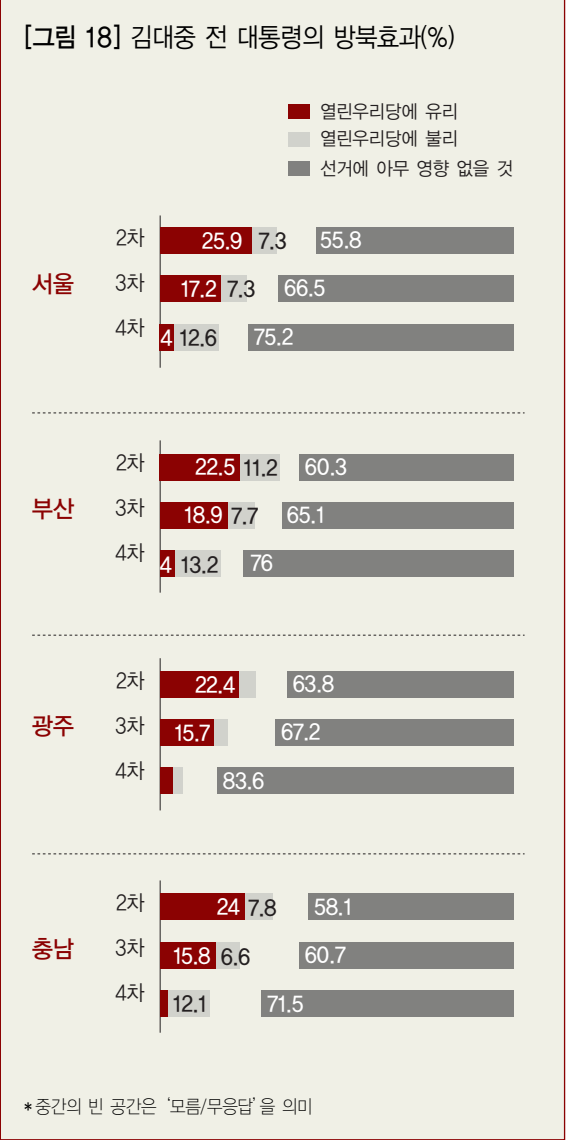
이 발언은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유권자의 58.2%가 문 전 수석의 발언을 지역주의 조장 발언으로 인식하였고, 부산 시민들조차도 과반수가 이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부산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응답자에 비해 ‘지역주의 발언은 아니다’ 라는 응답이 38.7%로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과반수(50.3%)가 문 전 수석의 발언을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나마 충남 유권자들의 44.2%만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인식하여 비판적 강도는 다소 약했다. 그러나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문 전 수석의 발언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반열린우리당 정서만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성향 및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이탈 요인으로 이어져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운 정부 및 여당에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계획 : 조용한 역풍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의 발언 못지 않게 선거 변수로 떠올랐던 이슈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여당의 지지 상승 요인으로 인식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계획은 실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열린우리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네 개 지역에서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25.9%에서 4.3%로 감소, 부산에서는 22.5%에서 4.5%로, 충남에서는 24%에서 2.7%로 모두 급감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광주에서조차도 다른 지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22.4%에서 3.1%로 크게 격감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번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선거 이후에 서울 75.2%, 부산 76%, 광주 83.6%, 충남 71.5%의 유권자들이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사안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제시한 그 어떤 이슈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4. 경제와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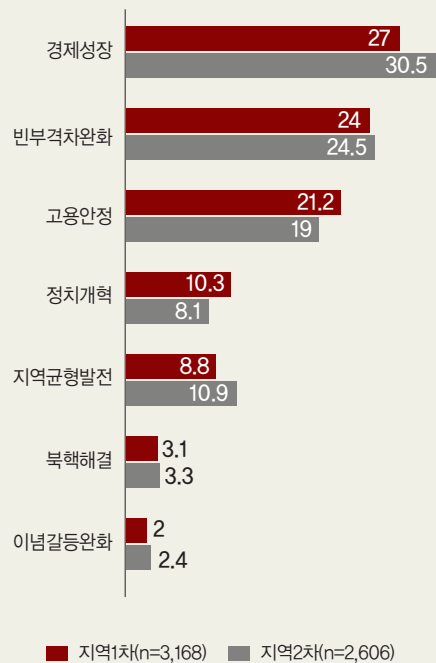
경제투표(economic voting)는 유권자들이 후보선택의 주요 기준 중의 하나이다.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힘이 약화되고 참여정부의 출범부터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경제투표는 투표결정요인의 하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핵심 이슈이다. 여기서는 경제요인이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1) 경제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기대(expectation) (2) 지역 및 가정 경제의 객관적 상태 변화 및 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evaluation)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문제, 누가 잘 풀어낼까?

패널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경제문제를 꼽았다. 1차 조사에서는 경제성장 27%, 빈부격차완화 24%, 고용안정 21.2%등 경제관련 이슈를 꼽은 사람이 72.2%였다. 반면 정치개혁(10.3%), 지역균형발전(8.8%), 복핵문제(3.1%),

이념갈등 완화(2.4%) 등 비정치적 이슈를 꼽은 사람은 총 30%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경제이슈 중에서도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이슈가 더욱 부각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2차 조사에서는 경제성장 이슈가 30.5%까지 늘어났다.

[그림 19]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4개 지역 각 항목 응답비율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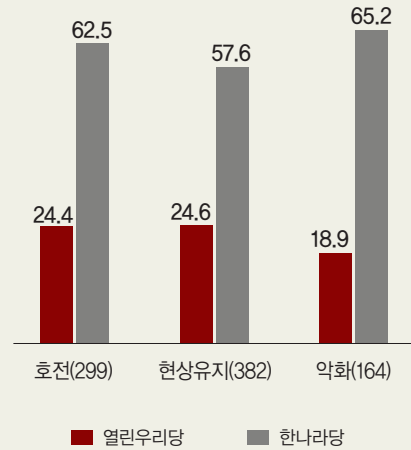
[표 3] 가장 중요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

	1차조사	2차조사
경제성장	한나라당 45.2	한나라당 51.7
빈부격차완화	열린우리당 24.3	열린우리당 23.7
고용안정	한나라당 22.4	한나라당 30.8
정치개혁	한나라당 27.5	한나라당 29.8
지역균형발전	열린우리당 33.3	열린우리당 40.5
북핵해결	한나라당 28.5	열린우리당 39.8
이념갈등완화	열린우리당 33.6	열린우리당 28.9

* 해당 과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그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정당과 %를 정리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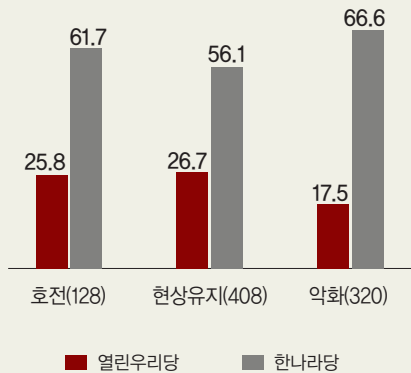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꼽고 있는 경제이슈를 어느 정당이 가장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표3]에서 특정 국가과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을 물어본 질문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경제성장, 고용안정, 정치개혁 과제에 강점을, 열린우리당은 빈부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이념 갈등 완화 과제에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경제성장 이슈에 대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문제가 부각될수록 한나라당이 이익을 보는 지지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열린우리당의 최대 강점이었던 정치개혁 이슈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탄핵이후 한나라당의 당 개혁 및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개혁적 절차를 도입한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실제 선거공천과정에서 오히려 주로 전략공천 방식을 채택하는 등 퇴행적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0] 지역경제 4년 평가별 후보지지



* 괄호안의 수치는 각 항목별 응답자수(1차 전국패널조사)
**선거시 지지후보 정당(2차 조사, 기권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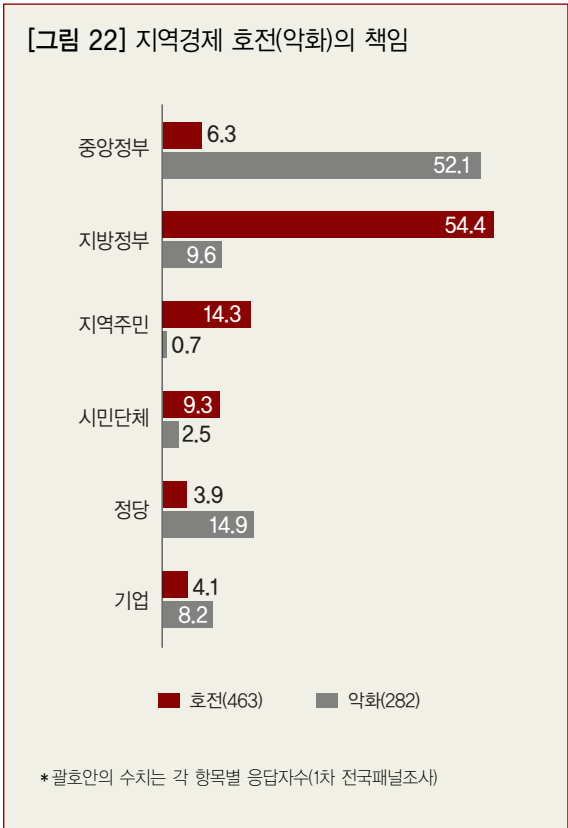
[그림 21] 가정경제 1년 평가별 후보지지



* 괄호안의 수치는 각 항목별 응답자수(1차 전국패널조사)
**선거시 지지후보 정당(2차 조사, 기권자 제외)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 평가 : 잘하면 지방 정부, 못하면 중앙정부

지역 및 가정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후보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



국패널 1차 조사에서 지역경제상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과 전국패널 2차 조사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문항을 교차분석했다.

[그림20], [그림21]를 비교해보면 첫째, 지역경제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사람이 적은 비율(164명, 19.4%)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정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악화되었다는 응답(320명, 37.4%)이 지역경제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다. 결국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경제위기설의 진원은 지역경제보다는 개인경제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건 가정경제건 현상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낮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지역경제 혹은 가계 경제의 책임을 열린우리당에 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경제가 호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만큼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 이는 경제상태가 호전된 사람일수록 집권당에 우호적이고, 악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야당에 우호적이라는 경제투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선 중앙정부의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지만 지방정부에서의 여당은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림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권자들 대다수가 경제호전의 공은 지방정부에, 경제악화의 과는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이중적 투표패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5·31 지방선거의 의미



1. 열린우리당 지지기반의 와해
2. 누가 이탈했는가?
3.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4. 정당선호 변화는 정책선호 변화인가?
5. 한나라당의 전국정당화?
6. 유권자, 선거결과에 만족하나?



1. 열린우리당 지지기반의 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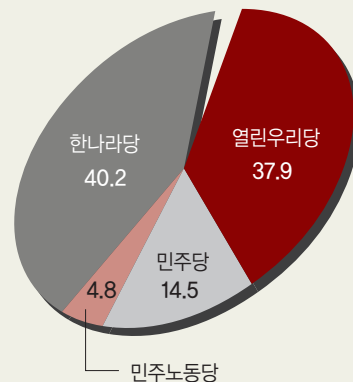
이상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선호가 어떻게 얼마만큼 변했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선거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해보았다. 이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했던 지지자들 중 얼마가 열린우리당 지지자로 남아있는지 살펴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하였던 433명의 응답자들에게 2006년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투표정당을 물어본 결과,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지지자들의 37.9%만이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40.2%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였으며, 14.5%는 민주당 후보에게, 4.8%는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게 투표한 것을 제외하면 절반 가량의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2004년의 17대 총선과 비교해봐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이탈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7대 총선에서의 지지정당과 이번 선거에서의 지지정당을 교차 분석한 결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 불과 44.7%만이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 총선에서 한

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 무려 92%가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한나라당 지지층의 강한 응집력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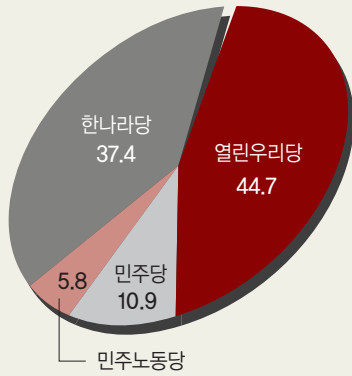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계층이었던 2030세대, 호남과 수도권, 이념적 진보층조차 열린우리당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지지기반 자체가 와해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16대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실패했던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강한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지지기반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23] 2002년 대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의 5.31지방선거 투표분포(%) : 전국패널 2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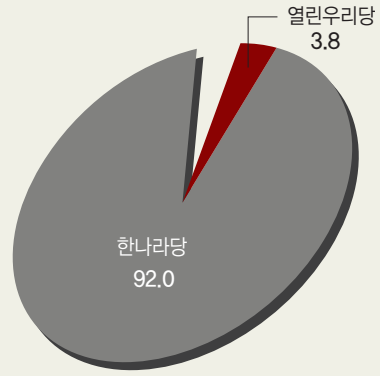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그림 24] 2004년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5.31지방선거 투표분포(%) : 전국패널 2차 조사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그림 25] 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5.31지방선거 투표분포(%) : 전국패널 2차 조사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2. 누가 이탈했는가?

그렇다면 열린우리당 지지에서 이탈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2차 패널조사 응답자 중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 및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이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얼마가 누가 이탈했는지 분석한다. 이들의 이탈 자체 뿐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이탈했는지는 이후 정국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림26]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과 각 당의 고정지지층과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새로운 한나라당 지지층은 노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한 태도에서 열린우리당 고정지지층보다는 한나라당 고정지지층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들이 이들의 평균연령은 열린우리당 고정지지층보다도 오히려 약 2세가량 젊다. 자기이념평가 점수를 보면 평균 4.9점(중도는 5점)으로 열린우리당 고정지지층(4.29)보다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중도보다 약간 진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 고정지지층과 다르게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33.3%)도 낮다.

이들 집단의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비율은 무려 96.6%로 한나라당 고정지지층보다도 부정적이다)



[그림 26] 새로운 한나라당 지지층의 특성 : 전국패널 2차 조사

	열린우리당 고정지지층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한나라당 고정지지층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비율	62%	86.6%	86.5%
본인의 이념성향 (10점. 진보1, 보수10)	4.29	4.9	5.21
열린우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48.5%	96.6%	88.4%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	19.4%	33.3%	65.8%
평균 나이(세)	45.1	43.4	49.7
평균 소득 (5점. 저소득1, 고소득5)	3.4	3.1	2.8
전체 유권자 중 비율	19.1%	16.0%	42.5%



3.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국정실패의 소재 : 정부와 여당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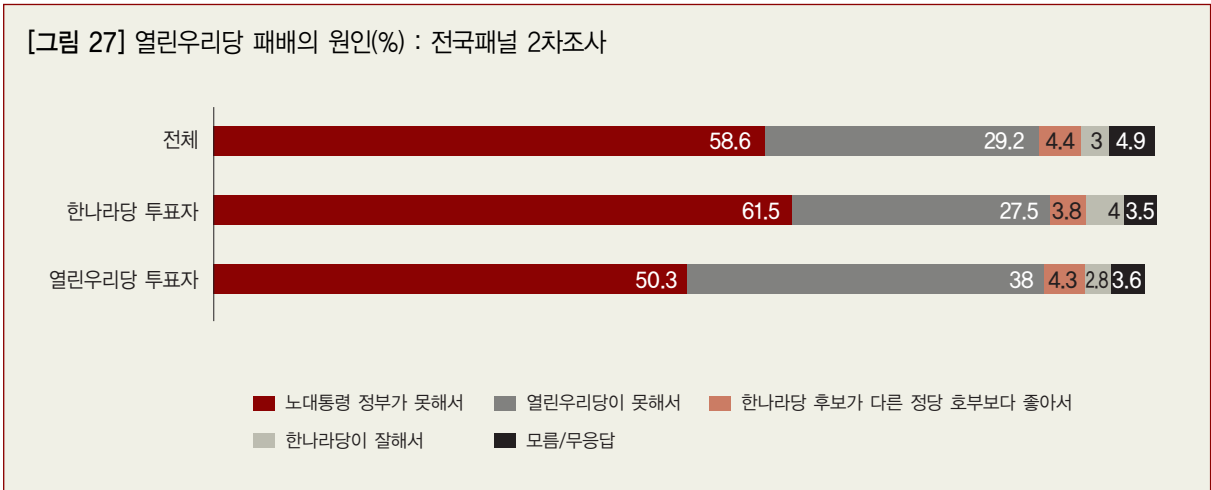
- 정부와 여당 탓이다 87.9%
-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회고적 투표
- 한나라당이 잘해서 3%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한나라당으로 표 쏠림이 나타난 이유를 물었다. 2차 전국패널조사 결과, ‘노 대통령과 정부가 못해서’가 58.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열린우리당이 못해서’는 29.2%였다. 반면, ‘한나라당이 잘해서’ 3%, ‘한나라당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보다 좋아서’ 4.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0% 가까이

가 여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나라당에 투표한 사람들 중 ‘노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라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61.5%로서 매우 높았고, ‘여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도 27.5%로 많이 나왔다. 열린우리당에 투표한 사람들조차 88.3%가 정부 혹은 여당의 잘못을 지적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준 이유는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독선적 국정운영을 심판하기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불신

- 기조와 내용보다는 능력과 추진방식
- 노대통령 기대만큼 개혁적이지 않았다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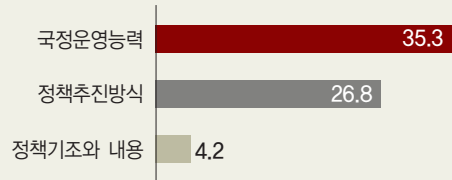
이번 패널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면서 정책기조와 내용보다는 능력부족과 추진방식을 보다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노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5.3%가 ‘국정운영 능력’, 26.8%가 ‘정책 추진방식’, 17.3%가 ‘정책 추진의지’를 지적한 반면, 4.2%만이 ‘정책기조와 내용’이 문제라고 대답한 결과가 이를 나타낸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기대만큼 개혁적이지 않았다’가 49.2%로 ‘기대 정도로 개혁적이었다’ 13.4%, ‘너무 개혁적이었다’ 15.8%보다 높았다. 즉 노무현 정부가 너무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책혼선과 능력부족 등으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도 한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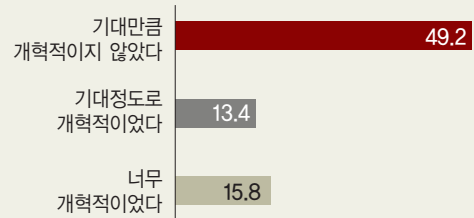
- 야당·보수언론·보수단체의 발목잡기에도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거둔 압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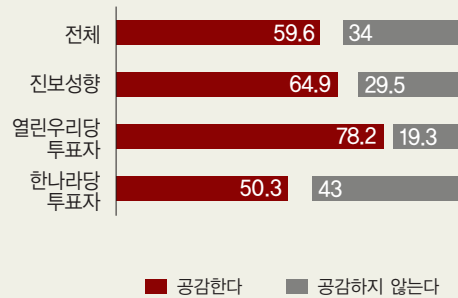
[그림 28] 노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



[그림 29] 노 정부의 국정운영평가(%)



[그림 30] 국정운영 원활하지 못한 책임은 야당, 보수언론 등의 발목잡기(%)



* [그림28], [그림29], [그림30]는 제2차 전국 패널조사 결과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의미는 탄핵 이후 총선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여당에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국정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1차적 책임을 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정부에 대한 태도 역



시 과도한 견제와 반대 일변도였다는 점에 불만이 있음이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야당이나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의 반대와 발목잡기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59.6%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야당이나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정치권은 주요 국가현안의 문제점이 불거질 때 마다 야당과 보수적 언론들은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돌린 반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주로 한나라당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지루한 정치공방이 계속되

어 왔다.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의 64.9%가, 열린우리당 투표자의 약 80%가 이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나라당에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조차 절반정도가 야당, 보수언론과 단체의 발목잡기가 국정운영이 원하지 못한 일조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큰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유권자들의 표가 집중된 것은 유권자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기대의 표시라기보다는 국정운영 실패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당의 실패가 가져온 반사이익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정당선호 변화는 정책선호 변화인가?

- 정당선호의 변화가 정책선호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아
-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선호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경쟁

한나라당으로의 표 쏠림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지지라는 가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나라당으로의 지지 변화가 유권자들의 정책변화를 수반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결과는 정책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적·정책적 균열(political or policy cleavage)의 가능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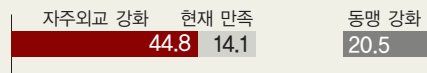
주요 정책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그들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지지로 환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방향이 대립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부동산 정책 수정론에 대해서는 29.1%가 규제 강화를, 15.8%가 현 부동산 정책의 근간 유지를 주장하는 등 총 45% 가량의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지지함으로써 규제완화를 주장한 사람들(40.7%)보다 약 5%가량 많았다.

대미 외교에 대해서도 현 정책에 만족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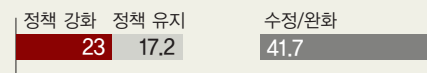
[그림 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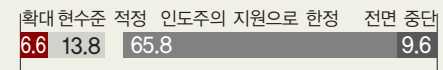
[그림 32] 대미외교에 대한 인식(%)



[그림 33] 교육평준화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림 34]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인식(%)



[그림 35] 한미 FTA에 대한 인식(%)



*[그림31]~[그림35]는 제2차 전국 패널조사 결과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다는 사람이 14.1%, 지금보다 자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이 44.8%로 약 60%에 달하는 유권자가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동조하거나 좀 더 강화하기를 원하는 반면, 20.5%만이 한미 동맹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평준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3%,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17.2%, 합계 40%로 수정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41.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지지패턴의 변화가 정책적, 이념적 선호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5. 한나라당의 전국정당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출신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호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최소한 타 지역 호남유권자 층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혐오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지지기반 확대를 꾀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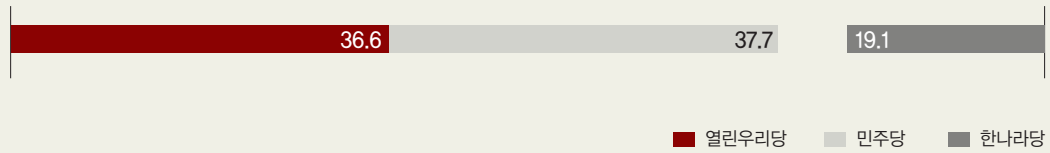
먼저 타 지역 거주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한 호남출신 유권자 183명을 대상으로 2차 전국패널조사에서 질문한 결과, 유권자의 36.6%가 열린우리당을, 37.7%가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한나라당을 선택한 유권자도 19.1%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대구/경북 지역 출신의 유권자 중 13.7%만이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영남 출신의 열린우

리/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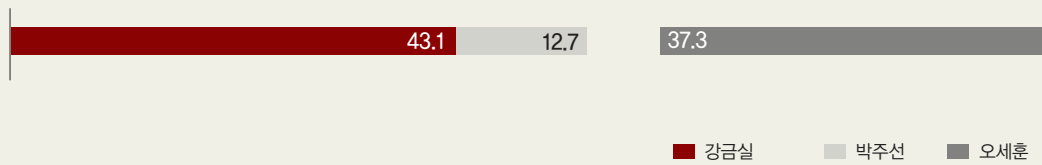
한나라당의 약진은 수도권으로 올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4차 패널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호남출신 유권자 102명 중 43.1%가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를, 12.7%가 민주당의 박주선 후보를 지지했지만, 37.3%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 수치는 서울 거주 경북/대구 출신 유권자의 강금실 후보 지지율 1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완전히 전국정당으로 성숙했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한나라당의 승리가 상당부분 정부와 여당의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빚어낸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국정실패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한나라당에게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가 한나라당의 전국정당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36]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 전국(N=183, %)



[그림 37]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 서울(N=102, %)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 [그림36]은 전국패널 2차 조사자료, [그림37]은 서울지역패널 4차 조사결과



6. 유권자, 선거결과에 만족하나?

선거만족도

- 전국 유권자 60.8%가 선거결과에 만족
- 선거결과에 민의 반영도에 대한 평가 높아, 광주 유권자들은 민의 왜곡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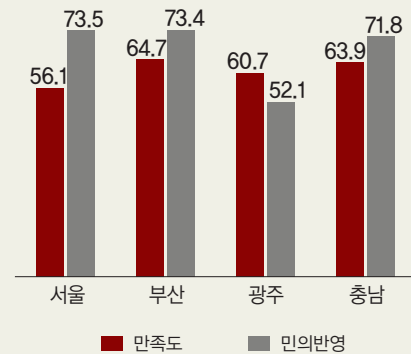
선거 사후에 실시한 제2차 전국패널 2차 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중 60.8%가 선거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각 개별 지역의 반응을 살펴보면 부산과 충남의 유권자들은 선거만족도도 높고 선거결과의 민의 반영도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어 서울이나 광주에 비해 선거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울 유권자들은 선거결과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점에는 동의(73.5%)하지만 선거결과에 만족하는 정도는 5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의 경우 유독 이미지 선거의 논란이 많았을 뿐 아니라 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던 것이 선거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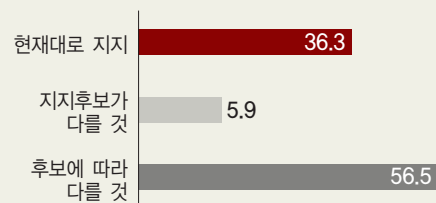
한편 광주는 반대로 선거 만족도에 대해서는 60.7%로 평균적인 응답이 나왔다. 그러나 반한나라당의 정서가 강한 지역 답게 한나라당의 독

식으로 끝난 선거결과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무려 20%포인트 가량 많았다.

[그림 38] 선거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민의반영(%)



[그림 39] 이번선거 시 지지정당을 대선에서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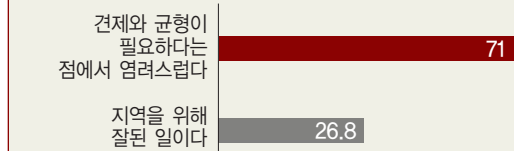
한나라당 독식에 대한 우려

- 대선에서는 후보에 따라 지지정당 바꾸겠다 56.5%
- 한나라당의 독주에 대해 염려스럽다 71%

그렇다면 이러한 한나라당의 싹쓸이에 대해서 전국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계속해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선거 사후에 실시된 제2차 전국패널조사에서는 “이번 선거에서의 지지정당을 대선에서도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과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지방권력을 독차지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러한 물음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의 지지정당을 대선에서도 지지’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36.3%만이 현재 대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56.5%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후보에 따라 지지를 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의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대선에까지 이어진다는 장담을 할 수

[그림 40] 한나라당 독식에 대한 반응(%)



없게 만든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지방권력을 독차지한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반면, ‘지역을 위해 잘된 일이다’는 26.8%에 그쳤다. 다수의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독주체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회고투표의 차원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한나라당이 독차지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잠정적이며 유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대선정국이 경우에 따라 유동적인 국면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1. 지방선거결과와 대선
2. 고건 전 총리에게 대한 기대
3. 정계개편의 진로



1. 지방선거결과와 대선

대선후보 지지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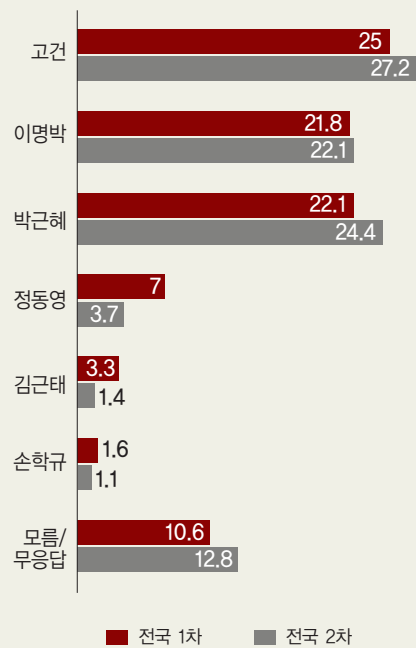
2차례에 걸친 전국패널조사에서는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대선후보의 지지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고건 전 총리가 25%로 1위를 기록하였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2.1%, 이명박 서울시장이 21.8%, 그리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의장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2차 조사에서 고건, 박근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대권주자들의 지지도가 절반정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권자들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이 대권후보의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선후보 지지자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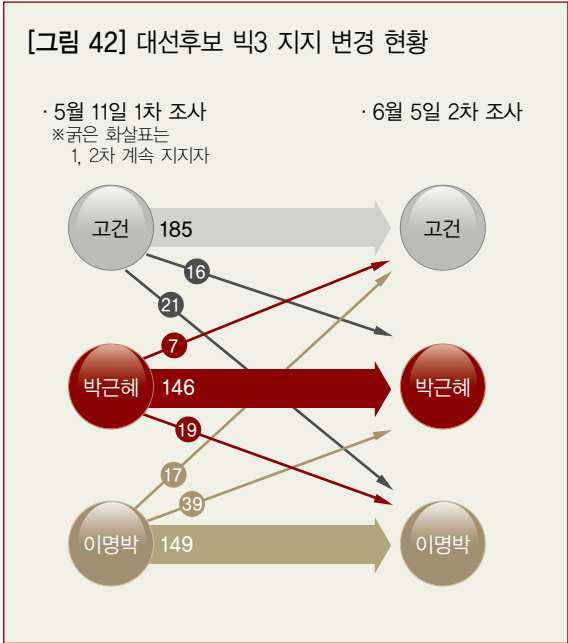
그러나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기간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지지 선호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

[그림 41] 주요 대선후보 지지도 추이(%)



들다. 그러나 현재 대선선두를 다투는 소위 ‘빅 3’ 후보사이에는 지지자간 이동이 적지 않았다.

[그림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건 전 총리 지지자들의 한나라당 후보로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1차에서 고건 전 총리 지지자 중 18명이 2차 조사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로 이탈하



였고, 21명이 이명박 서울시장에게로 이탈하였다. 반면 박근혜 총재에게서는 7명, 이명박 시장에게서는 17명만이 고건 전 총리 지지로 선회하였다. 2차 조사에서 고건 총리의 지지도가 상승한 주요 이유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지지자들 중 25명이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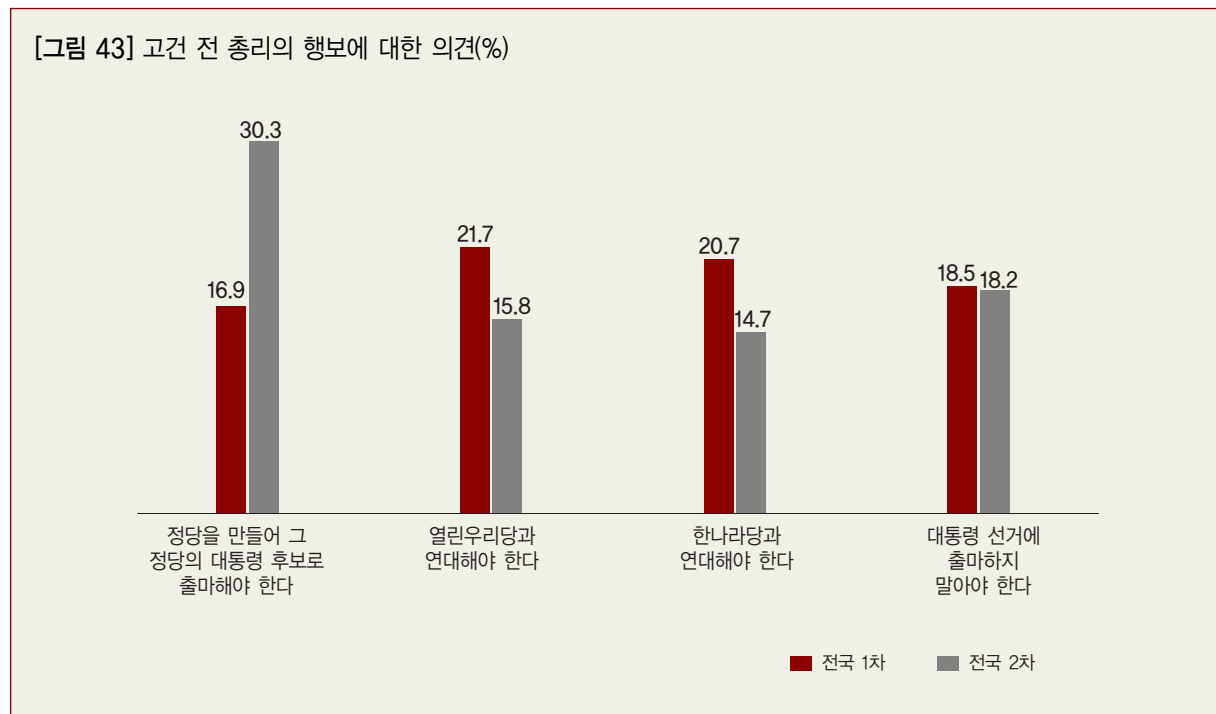
세 후보간의 관계만 놓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로 가장 이득을 본 대선주자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임을 말해준다.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서울시장에게서 39명,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에게서 24명의 지지자를 빼앗아 옴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2. 고건 전 총리에게 대한 기대

고건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도 여론의 변동이 있었다.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는 ‘정당을 만들어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두 배 가량 늘어났고(16.9%→30.3%),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했다(각각 21.7%→15.8%,

20.7%→14.7%).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에 대한 기대가 더욱 약화되면서 여당 지지층 중심으로 고건 전 총리의 독자행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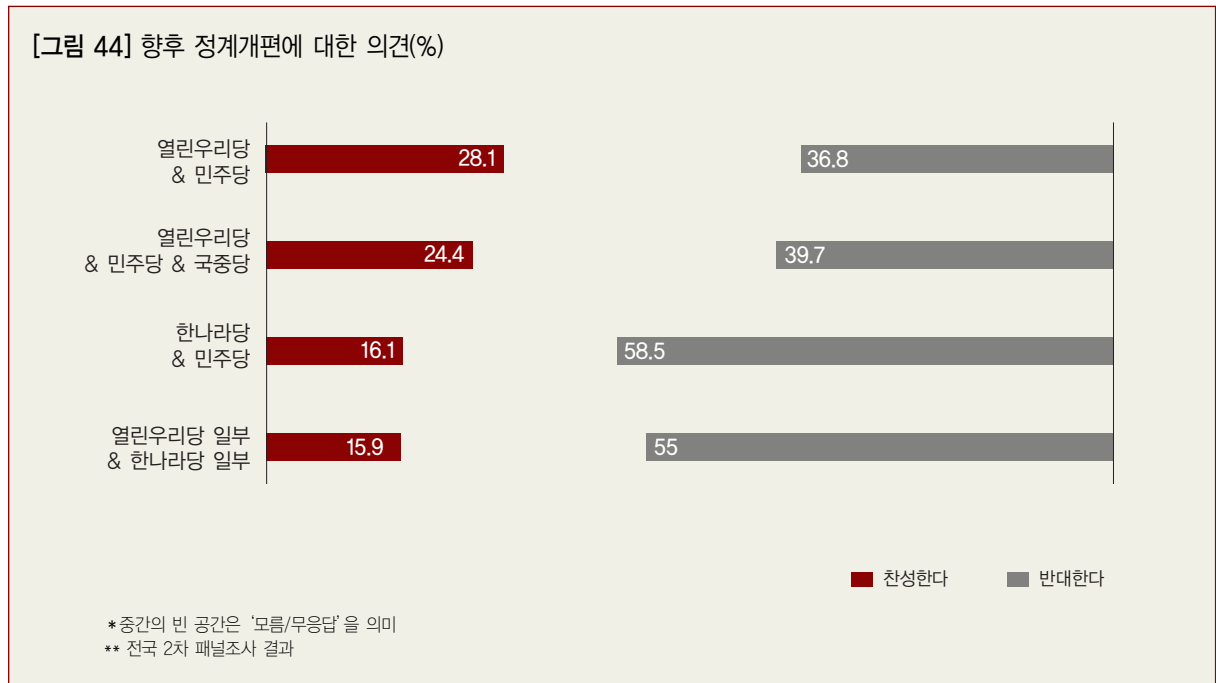




3. 정계개편의 진로

향후 정계 개편의 다양한 안에 대해 각각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모든 안에 대해 선거 이후의 정계개편을 찬성하는 의견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정치공학적인 정계개편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나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의 연대가 28.1%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하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간의 연대가 24.4%의 찬성율을 기록하여 뒤를 이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연대, 열린우리당 일부와 한나라당 일부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정보취득경로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거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었을까? 5월 10-11일 실시된 전국 1차 패널조사에서는 전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림45]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유권자의 대다수(42.1%)는 TV를 통해서 선거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과 인터넷이 각각 14.9%와 14.3%의 비율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별로 보면 정보취득경로가 대단히 상이해지고 있다. 젊은층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세대와는 달리 20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 정보를 얻는 경우가 31.2%로써 TV나 신문,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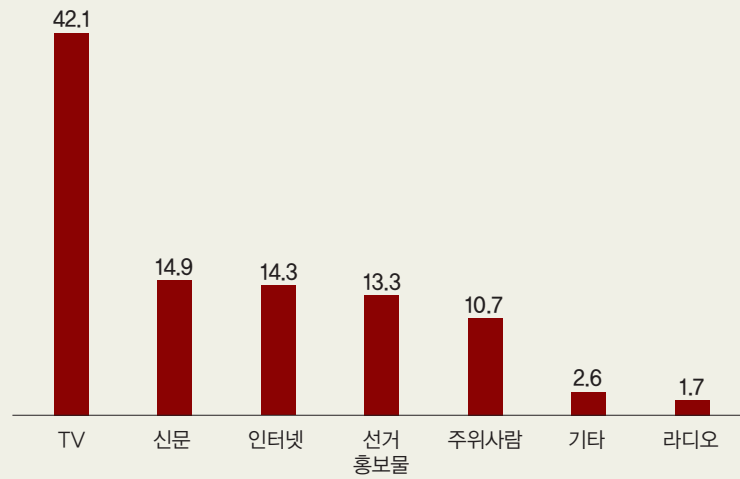
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30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선거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19.2%)은 비교적 높다. TV를 통해 얻는다는 비율(30.1%)보다는 낮았지만, 신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비율(15.1%)보다는 4.1%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인터넷이 갖는 정보 취득 경로로서의 매력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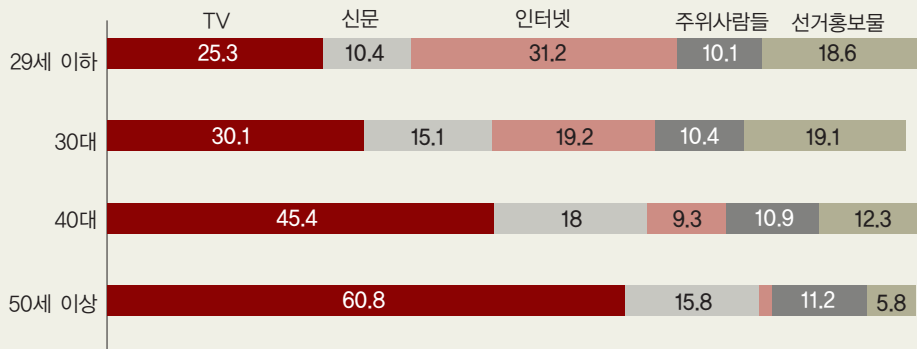
그러나 30대 이후로는 TV를 통해 선거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다른 경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30.1%, 40대의 45.4%, 50대 이상 세대에서의 60.8%가 TV를 통해 이번 지방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40대 이상 유권자에서는 과반수가 TV를 통해 선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선거관련 정보취득 경로(%)



[그림 46] 지방선거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매체(%)



*중간의 빈 공간은 '모름/무응답'을 의미

패널조사 방법론 및 선거결과



1. 패널조사 디자인
2. 조사개요
3. 실제 투표율과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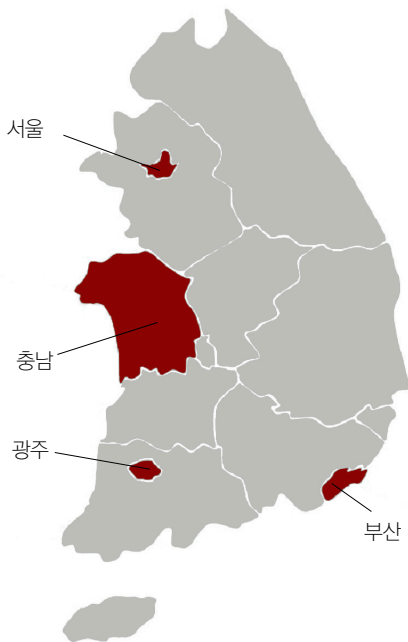


1. 패널조사 디자인

조사지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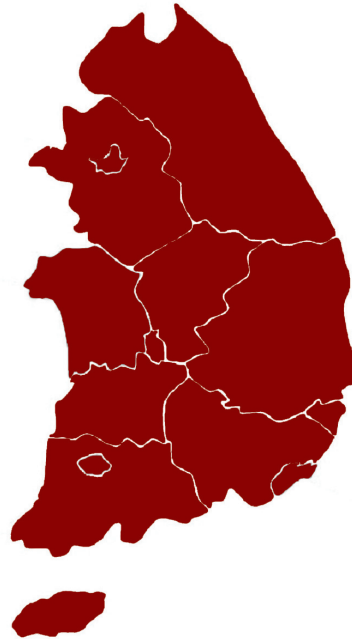
조사지역 및 조사회수는 예산에 맞추되 지역선정은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하고 여론변동 가능성이 높아 패널조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2007년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을 선발하였다.

[지역 패널]



4개 지역 각 800명 1차 패널구축,
최종 600명 패널조사 목표

[전국 패널]



1,300명 패널구축,
최종 1000명 패널조사 목표

→ 총 15,400 샘플(100% 유지 경우) :
{3,200명(4개 지역 800명) × 4회} + {1,300명 (1개 전국샘플) × 2회}

조사 회수

- (1) 4개 지역 : 총 4회 (선거 후 조사 포함)
- (2) 전국 패널 : 총 2회 (선거 전/후 조사)



질문지 구성

유권자의 선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리서치는 4월 19-20일 열린우리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 무당파 층을 각각 20~30대, 40~50대로 구분하여 총 6개 집단에 대한 FGD(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설문지에 반영함으로써 유권자의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방법 : 전화를 이용한 패널조사

여론조사방법에는 전화조사, 면접조사, 웹조사, 우편조사 등이 있으나, 선거조사의 특성과 방법론상의 타당성과 신뢰성, 조사비용 및 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전화조사 방법을 선택한다. 조사기간은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매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을 활용하고 각 지역 당 100회선 이상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2. 조사개요

지역패널조사

조사지역 및 대상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							
조사표본		1차(4.29)	2차(5.19)	3차(5.26)	4차(6.2)	1-2차 유지(%)	1-3차 유지(%)	1-4차 유지(%)
	서울	818명	670명	646명	626명	82	79	77
	부산	773명	667명	631명	614명	86	82	79
	광주	784명	648명	630명	614명	83	80	78
	충남	793명	621명	602명	583명	78	76	74
	합계	3,168명	2,606명	2,509명	2,437명	82	79	77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 방법	2005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할당을 한 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가구 내 적정 응답자를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했을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각 지역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다음과 같음							
		1차조사(4.29)	2차조사(5.19)	3차조사(5.26)	4차조사(6.2)			
	서울	±3.4%	±3.8%	±3.9%	±3.9%			
	부산	±3.5%	±3.8%	±3.9%	±4.0%			
	광주	±3.5%	±3.8%	±3.9%	±4.0%			
	충남	±3.5%	±3.9%	±4.0%	±4.1%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조사**

조사지역 및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조사표본	1차 1,299명 2차 1,001명 패널유지율 70%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 방법	2005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할당을 한 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가구 내 적정 응답자를 추출
표집오차	1차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각 지역별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7\%$ 2차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각 지역별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1\%$
가중치	모집단의 지역(권역)별/성별/연령별(10세 단위) 및 학력별 분포에 따라 부여
조사기간	1차 조사 2006. 5.10-11 2차 조사 2006. 6. 5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3. 실제 투표율과 득표율

패널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4개 지역패널 조사의 경우 평균 88.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패널조사의 경우 85.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과 충남지역의 패널들 중 무려 90%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지역 부산과 광주에서도 85.3%와 88.7%로 각각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실제 투표율이 51.6%였고, 서울의 경우 49.8%, 부산 48.5%, 광주 46.3%, 충남은 55.8% 였다.

실제 투표율과 패널투표율의 격차는 일부 투표기권자가 여론조사에서는 투표했다고 응답하면서 발생하는 오버 리포팅(over reporting) 문제로 일부 설명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패널조사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패널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 관심과 정보를 가진 적극적인 유권자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많게는 4차례(지역 패널조사)에서 적게는 2차례(전국 패널조사)에 걸쳐 동일한 패턴의 패널조사에 응한 샘플들은 적극적인 투표 의사층이나 정치적 관심

을 가진 사람들이 과대 대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패널 응답자들에게 적지 않은 학습효과가 있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패널조사를 반복하면서 패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 비해 많은 정치적 정보의 많아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선거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차 지방선거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결과에 판별분석 등 통계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지지율 결과와 실제 득표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서울시장 당선자 오세훈 후보의 경우 4차 패널조사에서는 62.2%의 지지를 얻었고, 실제로는 서울 시민의 61.1%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조사에서 나타난 강금실 후보의 지지율은 29.3%이고 실 득표율은 27.3%로써 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 시장으로 당선된 허남식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4차 조사에서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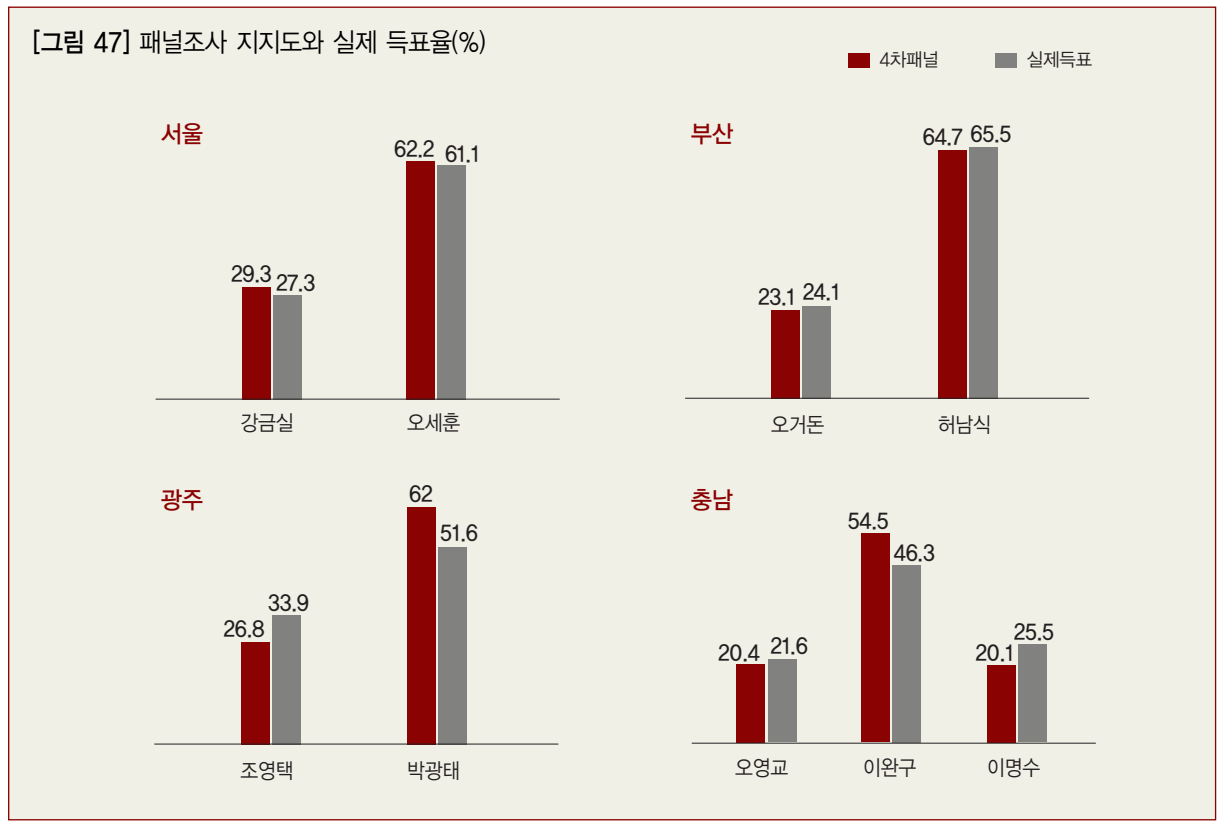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 간의 차이가 0.8%에 불과하며, 오거돈 후보의 경우도 1%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고심한 광주와 국민중심당에 대한 물밑 지지가 존재했던 충남의 경우에는 실제득표율과 조사결과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광주 지역 유권자들 중 박광태 시장에게 투표했다는 비율은 62%이지만, 실제 박광태 시장의 득표율은 51.6%로써 조사와 실 득표율 간의 차이가 10%에 달했다. 충남의 경우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2위와 3위의 순위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실제 1위 득표율(46.3%)과 패널조사의 지지율(54.5%) 사이에 8%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선거 후 조

사의 경우 당선자에 대한 지지율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이상 오버 리포팅 되어온 경험을 고려할 때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과 실제 투표율과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샘플에 적극적 투표의사층이 과대 대표됨에 따라 패널조사의 지지율이 실제 지지율에 상당부분 근접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패널오염효과 자체는 패널조사가 내재한 문제점으로서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속 연구 및 보다 치밀한 연구 디자인을 고안함으로써 문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전국패널조사 질문항목

(질문지 <http://www.eai.or.kr/korean/database/dblist.asp>)

주제	질문내용	1차조사	2차조사
후보/정당지지 및 지지 결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여부 · 투표할 후보/투표한 후보의 소속정당 · 투표 이유 ·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도 · 당선 가능성 · 지지후보 바꿀 의향 	- ○ ○ - ○ ○	○ ○ ○ ○ - -
일관/분할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단위별 동일정당 후보 투표 의향/투표 정당 ·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시 투표할(한) 정당 · 투표하지 않은 이유 	○ ○ -	○ ○ ○
후보지지 변경 및 지방선거 결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후보 변경 여부 · 지지후보 변경 사유 · 당선자의 업무수행 기대감 · 선거결과에 대한 만족도 ·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독식에 대한 평가 · 한나라당 승리/열린우리당 패배의 이유 	○ ○ - - - -	○ ○ ○ ○ ○ ○
정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참여정부의 개혁성향 평가 ·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 · 야당 및 보수언론, 보수단체 책임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 향후 대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입장 ·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현직시장/도지사 시정/도정 평가 · 정당 평가 · 가장 좋아하는 정당 · 가장 싫어하는 정당 · 자신의 이념성향과 가장 가까운 정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상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년간 지역경제 변화 인식 · 변화의 주된 동력 · 지난 4년간 다른 지역 대비 거주지역의 개선 정도 · 지난 1년간 가정살림 개선 정도 	○ ○ ○ ○	- - - -



주제	질문내용	1차조사	2차조사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 ·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한 공감도 · DJ 방북의 선거영향력 평가 · 열린우리당의 싸늘이 방지 주장에 대한 공감도 	<p>○ -</p> <p>○ -</p> <p>- ○</p> <p>- ○</p>	<p>-</p> <p>-</p> <p>○</p> <p>○</p>
정보취득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경로 	○	○
TV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토론 시청여부 ·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	-
TV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	-
지방선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관련 진술에 대한 공감도 · 지방선거의 의미 평가 · 변화된 지방선거 제도 평가 · 선거 결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	○
지방선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의 의미 평가 · 변화된 지방선거 제도 평가 · 선거 결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	○
지방선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결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	○
박근혜대표 피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대표 피습이 투표나 기권에 미친 영향 · 박근혜대표 피습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	○
투표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여부와 관련한 후보 지지 경향 	○	-
대선후보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후보 지지도 · 열린우리당 후보 중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후보 · 한나라당 후보 중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후보 · 고건씨의 향후 행보 · 정당간 변화 전망 · 광역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에 투표할 의향 · 정당만 고려할 때 투표할 정당의 후보 ·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뀔 경우 지지 여부 	○	○
대선후보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우리당 후보 중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후보 · 한나라당 후보 중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후보 · 고건씨의 향후 행보 · 정당간 변화 전망 · 광역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에 투표할 의향 · 정당만 고려할 때 투표할 정당의 후보 ·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뀔 경우 지지 여부 	○	○
대선후보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건씨의 향후 행보 · 정당간 변화 전망 · 광역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에 투표할 의향 · 정당만 고려할 때 투표할 정당의 후보 ·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뀔 경우 지지 여부 	-	○
대선후보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에 투표할 의향 · 정당만 고려할 때 투표할 정당의 후보 ·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뀔 경우 지지 여부 	○	○
대선후보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뀔 경우 지지 여부 	○	-
정당과 주요 정치인의 이념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이념 성향 · 정치인 이념성향 	-	○
정당과 주요 정치인의 이념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 이념성향 	-	○
여론조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 지지후보 선택에 여론조사 결과가 미친 영향 	○	-
여론조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후보 선택에 여론조사 결과가 미친 영향 	○	○
선거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관심도 · 투표 의향 	○	○
선거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의향 	○	-



주제	질문내용	1차조사	2차조사
과거투표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총선 투표 정당 · 2002년 대선 투표 후보 · 2002년 지방선거 투표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소득 · 지역 · 고향 · 이념성향(5점 척도) · 이념성향(11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부록 2. 지방패널조사(서울 · 부산 · 광주 · 충남) 질문항목

주제	질문내용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4차조사
후보/정당지지 및 지지 결정 요인	· 투표할 후보/투표한 후보	○	○	○	○
	· 투표 이유	○	○	○	○
	· 인물만 볼 경우 투표할 후보	-	○	○	-
	· 당선 가능성	○	○	○	-
	· 투표 여부	-	-	-	○
	· 투표 안한 이유	-	-	-	○
일관/분할 투표	· 선거 단위별 동일정당 후보 투표 의향/투표 정당	○	○	○	○
	·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시 투표할(한) 정당	○	○	○	○
후보지지 변경	· 지지후보 변경 여부	○	○	○	○
	· 지지후보 변경 사유	○	○	○	○
	· 향후 지지후보 변경 의향	-	○	○	-
	· 지지후보의 출마 전후 인식변화	-	○	○	-
	· 선거판세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망	-	○	○	-
	· 당선자의 업무수행 전망	-	○	○	○
	· 선거결과에 대한 만족도	-	-	-	○
	·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여론 반영 여부	-	-	-	○
	· 한나라당 승리/열린우리당 패배의 이유	-	-	-	○
정치평가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	○	○
	· 현직시장/도지사 시정/도정 평가	○	○	-	-
	· 정당 평가	○	○	○	○
	· 가장 좋아하는 정당	○	○	○	○
	· 가장 싫어하는 정당	○	○	○	○
	· 지역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정당	-	○	○	○
	· 국민통합을 잘 할 정당	-	○	○	○
	· 이념성향과 가장 가까운 정당	-	○	○	○
경제상황 평가	· 지난 4년간 지역경제 변화 인식	○	-	-	-
	· 변화의 주된 동력	○	-	-	-
	· 지난 4년간 다른 지역 대비 거주지역의 개선 정도	○	-	-	-
	· 지난 1년간 가정살림 개선 정도	○	-	-	-



주제	질문내용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4차조사
이슈	· 우리나라가 향후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	○	-	-
	· 과제를 가장 잘 풀 정당	○	○	-	-
	· 참여정부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	○	○	○	-
	·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한 공감도	○	○	○	-
	· 지역별 현안	○	○	○	-
	· 문재인 수석 발언에 대한 입장	-	○	-	-
	· DJ 방북의 선거영향력 평가	-	○	○	○
	· 열린우리당의 색깔이 방지 주장에 대한 공감도	-	-	-	○
정보취득 경로	· 지방선거 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경로	○	○	-	-
	· 지난 일주일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접한 빈도 : 텔레비전	○	○	-	-
	· 지난 일주일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접한 빈도 : 신문	○	○	-	-
	· 지난 일주일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접한 빈도 : 인터넷	○	○	-	-
	· 선거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인터넷 사이트	○	-	-	-
	· 선거관련 정보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	○	-	-	-
	· 선거정보를 통한 후보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	○	○	○	○
· 주로 보는 신문	○	-	-	-	
TV 토론	· TV 토론 시청여부	-	○	○	-
	·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	○	○	-
선거 관심도	· 선거 관심도	○	○	○	○
	· 선거에 관심이 없는 이유	○	-	-	-
지방선거 평가	· 지방선거 관련 진술에 대한 공감도	-	○	○	-
	· 지방선거의 의미 평가	-	○	-	-
	· 변화된 지방선거 제도 평가	-	-	-	○
대선후보 지지도	· 대선후보 지지도	-	○	-	○
	· 고건씨의 향후 행보	-	-	-	○
	· 정당간 변화 전망	-	-	-	○
	· 대통령 선거 시 광역단체장 선거와 동일정당 투표 의사	-	-	-	○
	·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	-	-	-	○
박근혜대표 피습 관련	· 박근혜대표 피습에 대한 인식	-	-	○	-
	· 박근혜대표 피습이 투표나 기권에 미친 영향	-	-	○	○
	· 박근혜대표 피습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	-	○	○
투표의향	· 투표의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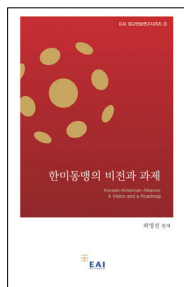
주제	질문내용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4차조사
과거투표 행태	· 2004년 총선 투표 정당	○	-	-	-
	· 22002년 대선 투표 후보	○	-	-	-
	· 22002년 지방선거 투표 정당	-	○	-	-
응답자 특성	· 성별	○	-	-	-
	· 연령	○	-	-	-
	· 학력	○	-	-	-
	· 직업	○	-	-	-
	· 소득	○	-	-	-
	· 지역	○	-	-	-
	· 고향	○	-	-	-
	· 이념성향(5점 척도)	○	○	○	○
	· 이념성향(11점 척도)	-	○	○	○



동아시아연구원(EAI)을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현재)

강운관	김설화	김진영	박근아	송홍선	이내영	이효재	진지운
강찬수	김성수	김진혁	박대균	신권식	이동욱	이희정	차국린
강홍렬	김세종	김창욱	박상용	신동원	이동찬	임상균	차순만
고승수	김수진	김철영	박상준	신동준	이동훈	임재환	채혜경
고은희	김시연	김하정	박수진	신성호	이마리	임현모	최 건
고형식	김신숙	김현전	박순휘	신영준	이민교	임현진	최관주
고혜선	김연옥	김형국	박용준	신윤경	이민자	임홍재	최복대
공성원	김영구	김형재	박재준	심윤보	이병인	장대환	최신림
곽노전	김영미	김형준	박정호	안건영	이상호	장원호	최윤준
곽준엽	김영원	김형찬	박준형	안준모	이선주	장의영	최종호
구상환	김용규	김효신	박진원	안중익	이성량	장진호	최진원
구준서	김용남	김희동	박찬근	여동찬	이여희	전경수	최철원
권용순	김용수	김희정	박찬선	예병민	이영복	전명선	하영호
금영수	김용준	김희진	박 현	오명학	이용자	전혜경	한계숙
김건호	김용직	남윤호	방효은	오미순	이원종	정랑호	한금현
김경순	김용호	남태희	박휘락	오복실	이이혜	정아영	한선호
김관호	김우상	노영훈	배위섭	오 철	이재섭	정연태	한숙현
김국형	김 욱	노재경	백승태	왕 서	이재원	정영국	한일봉
김기정	김 원	노호식	백혜영	우병익	이정민	정영진	한정원
김기준	김월명	라종일	서미혜	원종숙	이정은	정원철	한준희
김남이	김유상	류재희	서봉교	원종애	이정호	정재호	한지현
김 담	김윤희	마금희	서영민	유문중	이종수	조규완	한하람
김동건	김은숙	마정재	서용주	유성수	이지원	조동현	한홍일
김동은	김은영	문성환	서은숙	유옥상	이지희	조상호	현정은
김만호	김인혜	문윤성	서의석	유창수	이창현	조성재	황석희
김미영	김재두	문지욱	서창식	육은경	이충형	조은희	황성진
김병국	김정수	문진성	성정은	윤상민	이태석	조홍식	황의숙
김병표	김정은	민병문	소치형	윤용집	이 항	주미야	황정원
김부용	김 준	민선석	손재키	윤혜성	이해완	주영아	
김상기	김준희	민선영	송대창	은종학	이현욱	주진균	
김석우	김지정	민지숙	송우엽	이규호	이홍구	주 한	
김석준	김지현	박경수	송원진	이 근	이홍규	지만수	
김석진	김진기	박규호	송지연	이근우	이홍미	진선희	

EAI의 단행본 *



EAI 외교안보연구시리즈

- ① 21세기 한국외교의 대전략 : 그물망 국가 건설
- ②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 ③ 한반도 평화체제로드맵(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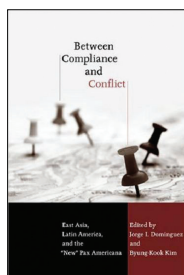
EAI 정책연구시리즈

- ①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 ②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 ③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 ④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상에서의 회고와 전망
- ⑤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 ⑥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 ⑦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근간)



EAI 시민정치여론시리즈

- ①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 ②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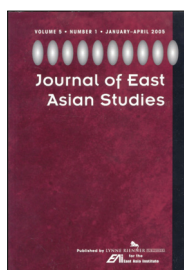


EAI 중미관계연구시리즈

- ① 2020년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 예측과 리스크 분석(근간)

EAI 영문서적

- ①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 ②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근간)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01~

EAI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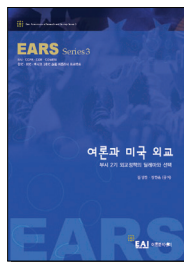
국가안보패널보고서 NSP Report

- 제 1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6. 17)
- 제 2호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 8. 4)
- 제 3호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 전략개념 (한용섭 2004. 9. 24)
- 제 4호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10. 22)
- 제 5호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 11. 1)
- 제 6호 북한제재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 1. 26)
- 제 7호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박철희 2005. 3. 22)
- 제 8호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태환 2005. 5. 23)
- 제 9호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네트워크 (이상현 2005. 10. 4)
- 제10호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김성한 2005. 11. 17)
- 제11호 [2차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6. 1. 2)
- 제12호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FTA 전략 (정진영 2006. 1. 2)
- 제13호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신성호 2006. 1. 25)
- 제14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재성 2006. 7. 12)
- 제15호 강압외교 (신성호 2006. 7. 13)



여론분석 워킹페이퍼 시리즈 EARS Series

- 제 1호 노무현 정부 1년 국정평가 (이내영 · 이성봉 · 정원철 2004. 6. 21)
- 제 2호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이내영 · 정한울 · 정원철 2005. 5. 11)
- 제 3호 여론과 미국외교 : 부시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김성한 · 정한울 2005. 12. 12)
- 제 4호 5·31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 표 쏠림의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 (이내영 · 홍승헌 · 신소연 · 정한울 2006. 12. 7)



북한연구패널보고서 Issues & Perspective

- 제 1호 북핵문제해결의 경제적 수단 : 보상과 제재의 효과와 한계 (박종철 2006. 6. 28)
- 제 2호 미국의 북한 인권정책과 북한 체제위협 (이대근 2006. 6. 28)



※ EAI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 (<http://www.eai.or.kr/korean/publicing/report/booklist.as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이상협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shaylee@eai.or.kr) TEL: 02-2277-1683(내선 106) FAX: 02-2277-1684

EAST ASIA INSTITUTE RESEARCH



EAI
EAST ASIA INSTITUTE

동아시아연구원(EAI)

Tel. +82-2-2277-1683

Fax. +82-2-2277-1684

<http://www.eai.or.kr>

EAST ASIA INSTITUTE RESEARCH